목차

발표 1

새 정부 지역문화정책과 문화예술생태계 활성화 방안 p.2

발제 : 김도일 (동국대학교 문화예술대학원 객원교수)

발표 2

문화분권·문화자치를 위한 지역문화정책 프로세스 제안 p.16

발제 : 이승택 (제주문화예술재단 이사장)

발표 3

새 정부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언 p.30

발제 : 라도삼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종합토론

좌장 : 황풍년(광주문화재단 대표이사)

토론 1

김선출 (전남문화재단 대표이사) p.44

장세길 (전북연구원 연구위원) p.48

토론 2

류상록 (전북문화관광재단 문화예술진흥본부장) p.54

김정숙 (담양군문화재단 사무국장) p.58

토론 3

백옥선 (전주문화재단 대표이사) p.62

김규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선임연구위원) p.66

새 정부 지역문화정책과 문화예술생태계 활성화 방안

김도일
(동국대학교 문화예술대학원 객원교수)

차례

1. 들어가며

2. 역대 정부의 문화정책 소고

3. 문화정책의 핵심 구조와 수단

4. 새정부의 문화정책 <문화예술체육강국>

5.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제언

1. 들어가며

▪새로운 시대로의 도래

• 팬데믹 재난국면 속 사회체제 전반의 재구조화: 피해구제에서 선제적 사회보장 체제로의 전환, 공공의료와 보건체제의 재구조화, 통합적 사회 정책(보건, 교육, 과학기술, 문화예술)이 요구되는 사회.

• 기술혁명과 서드라이프(Third Life)시대: 물리적 삶과 가상공간의 허구적 삶의 공존 등 삶의 전반에 변화가 진행되면서 4차 산업혁명에 발맞추어 산업과 경제구조의 개편.

• 문명의 전환은 기술만이 아니라 예술영역과 삶의 일상, 인간관계, 교육 등 인류문화의 전반에 걸쳐 이전의 생활과 사고방식의 전환 요구.

1. 들어가며

▪ 문화예술계의 변화

• 코로나 이후의 문화 예술의 창작・매개・수용・공유・재생산 따위에 관련된 시간과 공간, 사람, 상호 관계를 포함하는 복합적 체계인 문화예술생태계 회복과 새로운 체계로의 전환.

• 디지털 문화 전환(첨단기술 활용 융복합 콘텐츠 및 미디어플랫폼 개발)과 포스트코로나 문화 전환(문화예술의 생태계 회복, 온·오프 연계 환경 구축, 문화 일상의 삶) 진행.

• 문화의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의 위상이 강화됨에 따라 문화예산의 확대와 문화분권과 문화주권의 주인으로서 지역문화 활성화. 예술의 자율성, 독립성, 현장성에 기반한 행정 혁신이 필요한 시기.

스스로 생각하며 걸어가야

뒤돌아 볼 때마다

앞의 풍경이 새로워진다.

2. 역대 정부의 문화정책 소고

▪ 문민정부(1993-1998) 문화정책 구체화

• 문화정책이 독자적인 정책영역으로 등장 계기 마련.

• 문화복지 중장기 실천계획을 발표하여 문화복지정책 도입.

• '문화의 산업화, 산업의 문화화'라는 명제 아래 '문화산업' 지원 정책 시작.

• 문화관광부가 독립부처로 승격하면서 문화체육부 창설.

2. 역대 정부의 문화정책 소고

▪ 국민의 정부(1998-2003) 문화정책 규제 완화

•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는 문화정책의 팔길이 원칙 기조
• 문화예산 1% 시대 마련.
• 새 문화관광정정책(금강산 관광)과 일본문화 개방과 북한 영화 노래 도입.
• 문화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문화산업진흥법제화(문화산업진흥기본법)제정.
• 영화진흥법을 개정해 영화진흥공사를 자율적인 민간기구 형태의 영화진흥위원회 설립.
• 국립문화예술단체 재단법인으로 독립 기관화.
• 문화체육부를 문화관광부로 변경.

2. 역대 정부의 문화정책 소고

▪ 참여정부(2003-2008): 문화민주화 전략 확대

-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를 '자율, 참여, 분권'이라는 기조 아래 강화.
- 문화예산 확대와 '창의한국', '새 예술정책 〈예술의 힘〉', '문화강국(C-KOREA) 2010' 등 총체적 국가문화정책의 원칙과 방향 정립.
- 문화예술교육과 스포츠산업 등 통합적인 문화정책 구상.
- 문예진흥원을 문화예술위원회로 전환.(문화예술인 스스로 문화정책 수립 기틀 마련)
- '예술의 산업적 기반 구축'과 '예술 분야별 산업적 발전 지원'으로 예술 시장의 기능을 강화하여 예술의 자생력을 확보한다는 비전 설정.

2. 역대 정부의 문화정책 소고

▪ 이명박 정부(2008-2013) 콘텐츠 산업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

- 저소득층을 위한 문화향유권의 확대.(문화바우처제도 시행)
- 콘텐츠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
- 예술인복지법 제정과 실행.
- 정부기관을 통한 한류의 정책적 지원 본격화-한류의 세계화.
- 진보적 문화예술인과 단체에 대한 인위적인 조정.(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 남북문화 교류 단절.
- 문화관광부를 문화체육관광부로 재편.

2. 역대 정부의 문화정책 소고

▪박근혜 정부(2013-2017) 문화융성

- 문화융성과 창조경제의 정책 융합 시도.
- 문화가 있는 날 지정.
- 문화기본법(문화발전을 위한 국가적 책무 정의)제정.
- 문화복지 대상이 확대되어 문화 격차 축소.(문화사각계층은 항상 존재의 한계)
- 지역문화재단의 설립 확산 시기.
-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과 표현의 자유 논란.

2. 역대 정부의 문화정책 소고

▪문재인 정부(2017-2022) 문화비전 2030 사람이 있는 문화

- 국민의 문화 향유권 신장 및 지역 간 문화 균형 발전-통합문화이용권 확대, 문화비 소득공제 도입, 생활문화예술동아리 지원확대, 지역 12개 문화도시선정.
- 예술인 창작권 및 복지지원강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 조사 및 제도개선 위원회 백서 발간, 예술인 고용보험 시행, 예술인 복지 확대, <예술인 권리보장법> 제정.
- 공정한 문화산업 생태계 조성 및 세계 속 한류 확산- 콘텐츠 산업 세계 7위, 21년 세계 문화 영향력 7위, 한류의 문화 영향력 확대.
- 평창동계올림픽 성공적 개최, <스포츠클럽법> <스포츠기본법> <체육인 복지법> 제정, 장애인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확대.

2. 역대 정부의 문화정책 소고

2022년 문체부 부처 업무계획(출처: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비전	세계를 선도하는 문화강국, 국민이 체감하는 문화일상	
3대 중점과제 및 10대 세부과제	1. 문화강국 위상 공고화	2. 문화일상의 조속한 회복
	① 케이-콘텐츠 해외 진출 확산	④ 관광·체육 등 업계 회복
	② 한류의 산업적 가치 제고	⑤ 일상에서 다시 누리는 문화생활
	③ 문화 전반으로 한류 저변 확산	⑥ 문화예술을 통한 국민 위로
	3. 미래 문화·체육·관광 기반 강화	
	⑦ 케이콘텐츠 디지털 뉴딜 성과 창출	⑧ 창의적인 미래 인재 양성
	⑨ 공정한 문화·체육 생태계 조성	⑩ 특색있는 지역 문화·관광 여건 조성

3. 문화정책의 핵심 구조와 수단

▪문화정책의 핵심구조

문화예술지원, 문화산업, 문화향유권

▪문화정책의 수단

문화예산, 문화거버넌스, 문화행정

▪문화정책의 선순환

예술교육, 창,제작 지원, 유통, 향유, 예술인 권리와 복지. (지역문화)

새 정부 문화정책

문화예술체육강국

4. 새정부의 문화정책 <문화예술체육강국>

1)문화예술체육강국 정책 공약 (출처:국민의 힘 정책공약집)

▪전 국민 문화향유시대를 열겠습니다.

- 문화누리 지원 카드 확대, 메티버스 공공서비스 제공과 문화시장 확대, 생활문화 활동체계 지원, 문화비 소득공제 연말정산 확대.

▪공정하고 사각지대 없는 문화예술인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 문화예술 재원 안정적 확보와 예술지원 자율성 제고, 예술인 긴급구호 지원 강화, 예술창작 다년간 지원 위주 전환, 문화예술인 재교육 활동 지원, 문화예술창작 공간 조성과 지원, 예술인 자격증 발급 행정 간소화.

▪ K-컬처를 세계 문화의 미래로 발전시키겠습니다.

- 세계 시장 진출을 위한 포괄적 지원체계구축, 한국문화를 글로벌 문화의 미래로 발전.

4. 새정부의 문화정책 <문화예술체육강국>

1) 문화예술체육강국 정책 공약 (출처:국민의 힘 정책공약집)

▪ **K-컬처 스타트업 지원으로 세계를 감동 시키는 문화산업 선진국으로 도약하겠습니다.**

• '세계 공감 국민창작 공모시스템' 구축, 콘텐츠 관련 예산지원 확대, 저작권법 제도 정비 및 유통 활성화, 저작권법 보호를 통한 '문화 주권' 강화, K-콘텐츠 청년 일자리 50만개 창출, 콘텐츠 제작자 지원확대.

▪ **전통문화유산을 미래의 문화자산으로 보존하고 가치를 높이겠습니다**

• 문화재 관리체계 혁신과 제도 개선, 문화재 보존 연구기관 기능 강화, 무형문화재 보존을 위한 문화재재단의 기능 강화, 전통문화 유산과 전통사찰 보존 정책 강화.

▪ **게임산업의 불공정 문제를 해소하고 e스포츠를 대한민국 미래산업으로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 '국민이 참여하는 게이머 권익보호제도'로 확률형 아이템 정보 완전 공개, 게임 소액 사기 전담 수사기구 설치, '지역 거점 e스포츠클럽'활성화, '게임접근성진흥위원회' 설립으로 장애인 게임 접근성 불편 해소.

4. 새정부의 문화정책 <문화예술체육강국>

1) 문화예술체육강국 정책 공약 (출처:국민의 힘 정책공약집)

▪ **자유롭게 스포츠를 향유 할 국민 스포츠권을 보장하겠습니다.**

• '국민스포츠 인센티브' 제공, 유·청소년·노인 체육활동지원, 아웃도어 래저스포츠 지원, 스포츠 사회적 기업 지원.

▪ **건강한 전문체육 시스템을 구축하고, 체육 재정을 확대하겠습니다.**

• 전문체육 멀티소스 양성 시스템 지원, 전문체육 활성화(실업팀 지원 확대), 체육재정 확대, 스포츠 인권문제 신고-처리 시스템 구축,

▪ **전국 차박 명소를 1만 여개 발굴하여 개방하겠습니다.**

• 차박 가능지역 발굴, 지도앱 개발 편의성 강화, 가족 캠핑장 1천곳, 자연 휴양림 시설 추가 확충.

4. 새정부의 문화정책 <문화예술체육강국>

2)<문화예술체육강국> 정책의 의의와 한계

• 새 정부의 당면한 과제는 미래산업 발굴이며 새로운 신성장동력으로서 '문화'에 대한 인식은 공유.

• 문화분야 공약에 비전과 새로운 문화전략이 없으며 기존 사업의 재확인.

• 포스트코로나 시대 핵심 중 하나가 되어야 할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지역별 문화 격차 해소와 문화자치에 대한 정책 부재.

• 문화 예산 확보의 불투명성.

문화의 힘은 "소통"

새 정부 문화정책의

새로운 기대를

지역문화 진흥으로부터

5.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제언

▪ 지역문화의 현황

• 지역과 세계 교류의 매개자, 문화적 다양성과 문화 경쟁력의 촉매, 지역매력도의 견인차로서 지역문화의 중요성 인식.

• 지역문화는 문화민주주의와 삶의 질을 측정하는 기준이며 지역과 지역 사이에 이루어지는 문화 간 협력 작업 증가.

• 지역문화를 미래 경제의 자산으로 인식하는 '세방화'(glocalization) 개념 확산.

• 사회 전반에 걸친 고령화, 지역소멸 등의 가속화에 대한 대안으로서 지역 문화생태계의 중요성 제고

5.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제언

• 결론: 지역문화진흥 정책제언 1.

▪ 지역의 문화자치 강화

• 국가적 차원의 지역별 특색과 문화적 차이를 존중하고 다양성을 살려 지역주민이 주도하는 특화된 문화정책이 요구됨.

• 지방정부의 문화영역에 대한 관심과 변화하는 문화환경에 유기적으로 대응하는 독자적 정책추진 환경 마련하여 지역주민 주도의 지역문화 협치 체계 구축.

• 정부-지역 간 정책 및 역할 조정을 위한 지역 참여 비율 상향과 기초 단위 지방정부와 지역주민 간의 문화 협치 강화 필요.

5.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제언

• 결론: 지역문화진흥 정책제언 2.

▪ '문화도시' 사업의 확대

• 문화도시 사업은 지역의 시민력에 기초한 지속가능한 도시문화생태계를 구축하는 문화자치의 중요사업.

• 현행 문화도시 사업은 시민주도적 지역문화 거버넌스 구축, 사업추진 과정의 중요성 인식. 도시 생태계의 문화화 등의 방향성 마련과 지역의 독자적 문화역량을 키우는 주요 정책 사업.

• 문화도시 추진과정에서 구축된 지역 문화인력의 전문성이 지역에서 확장과 발전을 기할 수 있도록 지역문화인력 생태계 활성화 계획 필요.

5.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제언

• 결론: 지역문화진흥 정책제언 3.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문화거버넌스 구축

• 중앙정부-광역-기초간 협업을 위한 역할 정립과 권한 부여 - 상생적 관점에서 지역문화협약 등 제도적 방안에 대한 적극적 모색.

• 문화 예산의 부족과 제도나 정책의 보완 필요. (관련법들이 중앙/지방 간 Top-down 방식 운영)

• 정부-지자체 정책 협력체로서 지역문화재단 역할 강화-한광연, 전지연 통합연합회 법인화 필요.

• 지역과 상생을 위한 상향식 정책 협력체계 마련 - 시・도 지역문화협력 위원회 설치하여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적극적 정책 채널 필요.

5.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제언

정책 제언: 총론

▪ 국가문화정책의 전환의 계기 마련 기대

- 문명사적 전환의 관점에서 문화국가라는 국정 비전 제시.
- 문화의 사회적 가치 경제적 가치에 대한 위상 강화.
- 문화 예산의 대폭 확대.
- 강력한 문화분권과 문화주권의 주인으로서 지역문화 진흥.
- 예술의 자율성, 독립성, 현장성에 기반한 행정 혁신.

감사합니다.

발표2

문화분권·문화자치를 위한 지역문화정책 프로세스 제안

이승택
(제주문화예술재단 이사장)

문화분권, 문화자치를 위한 지역문화정책 프로세스 제안

제주문화예술재단 이승택 이사장

JFAC 제주문화예술재단 Jeju Foundation for Arts & Culture

Prologue

Jacques Derrida, Deconstructivism

경계를 가로지르는 상상의 시작

2021
제주문화예술섬
프로젝트

JFAC 제주문화예술재단
Jeju Foundation for Arts & Culture

이 승 택

JFAC 제주문화예술재단
Jeju Foundation for Arts & Culture

*** 現 제주문화예술재단 제10대 이사장**

주요경력
* 열린도시연구소 대표
* 갤러리 하루 대표
* 문화도시공동체 쿠키 대표
* 前 제주특별자치도 정책보좌관(문화예술과 도시건축분야)
* 前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지원센터장
* 공주시 예비문화도시사업 자문위원
* 前 제주대학교, 건국대학교, 중앙대학교 등 겸임교수/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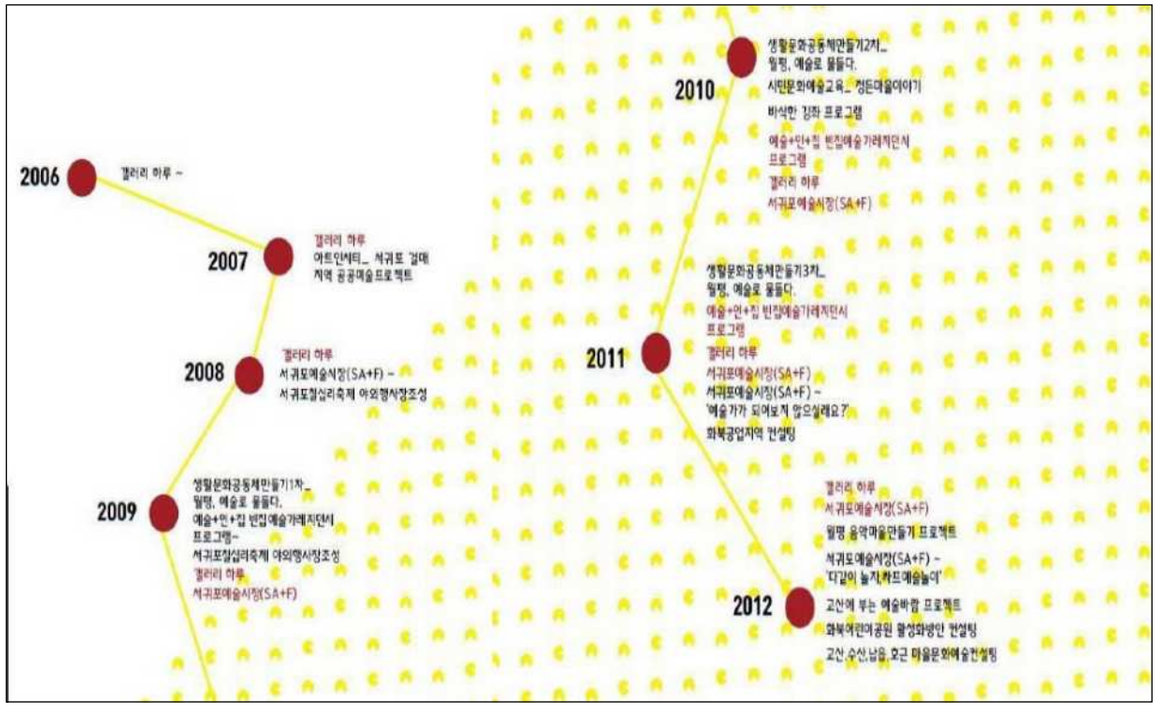
주요활동
-문화체육관광부 생활문화공동체 만들기 시범사업
'월평프로젝트' (문화체육장관상 수상)
- 문화체육관광부 <산업단지 및 폐산업시설 문화재생사업>,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 <문화적 도시재생사업> 등 문화사업 컨설턴트 역임

문화도시공동체 쿠키는

모든 가치의 중심을 인간과 환경에 두고,
중앙이 아닌 변방에서의 다원적 문화활동을 펼치는 단체입니다
다음과 같은 활동을 통해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아름다운 지역만들기를 추구합니다

1. 창작 : 다양한 문화예술작업의 창작, 지원
2. 교류 : 예술가와 대중, 예술가와 예술가, 시대간, 지역간의 예술적 교류
3. 교육 : 강좌, 세미나를 통한 문화예술교육과 동아리 활동을 통한 예술대중화

문 화 도 시 공 동 체 쿠 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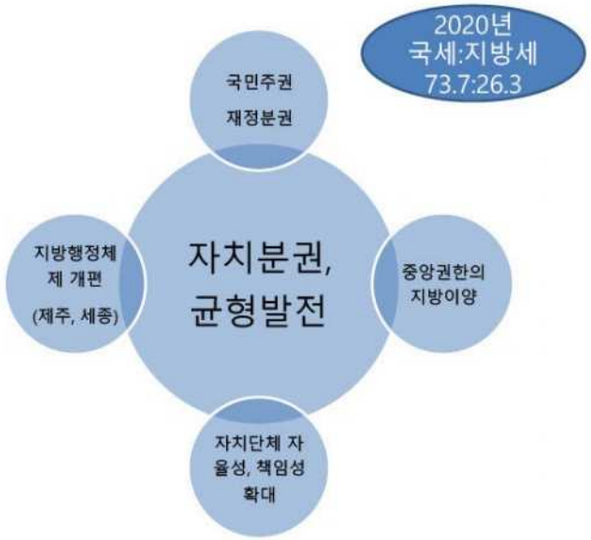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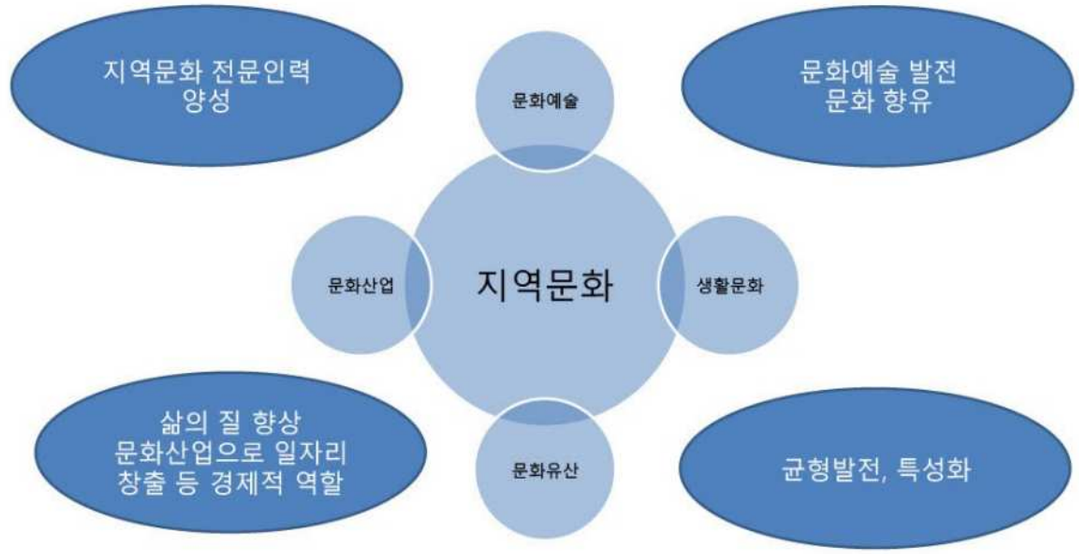
정 의

지방분권 [地方分權]
국가의 통치 권력을 중앙 정부에만 집중시키지 않고 각 지방 자치 단체에 나누어주는 일
(다음백과사전)
자치분권을 가리킨다. 행정조직을 권한분배관계를 표준으로 하여 분류함에 있어서 국가기관 내부 상하간이나 중앙 · 지방간에 행하여지느냐 또는 국가와 독립한 법인격 있는 단체와의 사이에서 행하여지느냐에 따라서 권한분권과 자치분권으로 나눌 수 있다. 자치분권은 분권주의의 가장 발전된 형태이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의미의 지방분권에 입각하고 있다(헌법 제117조1항).
(법률용어사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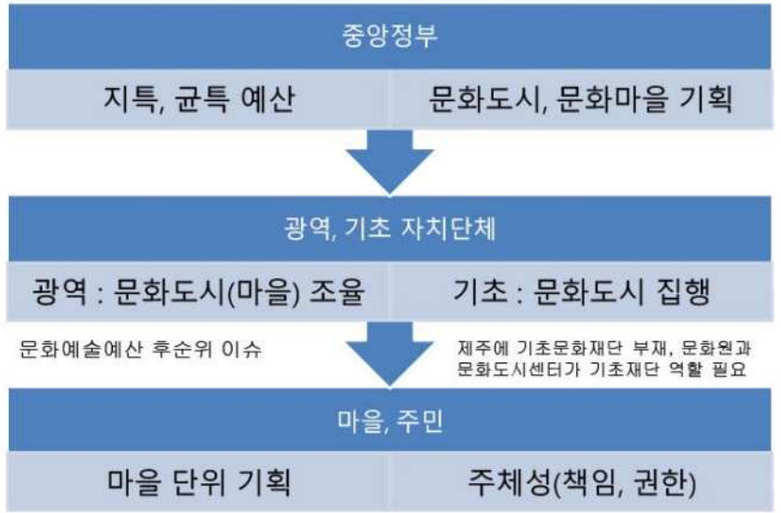
자치 [自治]
일반적으로 지방 공공 단체가 어느 정도 국가 의사로부터 독립하여, 공선된 사람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행정 업무를 수행하는 일

거버먼트 government
거버넌스 governance





참고: 지방자치법, 지역문화진흥법



마을, 주민	
마을단위 기획	주체성(책임, 권한)
마을 차원의 조사, 연구 (주민참여예산 등)	지속가능한 마을 기획
광역, 기초 자치단체	
광역 : 문화도시(마을) 조율	기초 : 문화도시 집행
조사, 연구, 기획 예산 지원 –> 사업 지원 또는 중앙 공모 신청	마을, 생활권, 기초 단위 중간지원조직(자치조직) 필요
중앙정부	
지역 사업 지원 방식 전환, 방향성을 제시하되 지속가능성, 실행가능성을 두고 판단	개인, 공동체의 사업을 엮어주고 확장할 수 있는 영역에 대한 지원

제주 곳곳의 * '문화봉화대'를 밝히는

〈제주문화예술섬〉 프로젝트

The Island of Culture and Art Jeju Project

* '문화봉화대'는 문화를 올리던 독특 의미하는 것으로서, 지역마다 문화적 개별성을 갖는 지역문화거점에 문화예술의 힘을 불어넣어서 제주도 전역에 문화적 봉화를 밝힌다는 의미를 담고 있음

20201106 Jeju Foundation Arts & Culture

제주 어디서나 풍요로운 문화예술을 누릴 수 있도록

제주문화예술섬 프로젝트는 제주시 216개 마을, 서귀포시 105개 마을이 고유하게 축적해온 문화 자산을 발굴하고 마을마다 고유한 문화예술의 봉화를 피워 아름다운 문화예술의 섬, 제주를 만들기 위해 시작했다.

제주문화예술섬 프로젝트 추진 과정

2016년
- 제주 문화예술의 섬 조성 전략(제주연구원, 2016)
- '제주의 가치 창조, 문화예술의 섬 구현'이라는 비전 아래 정책연구 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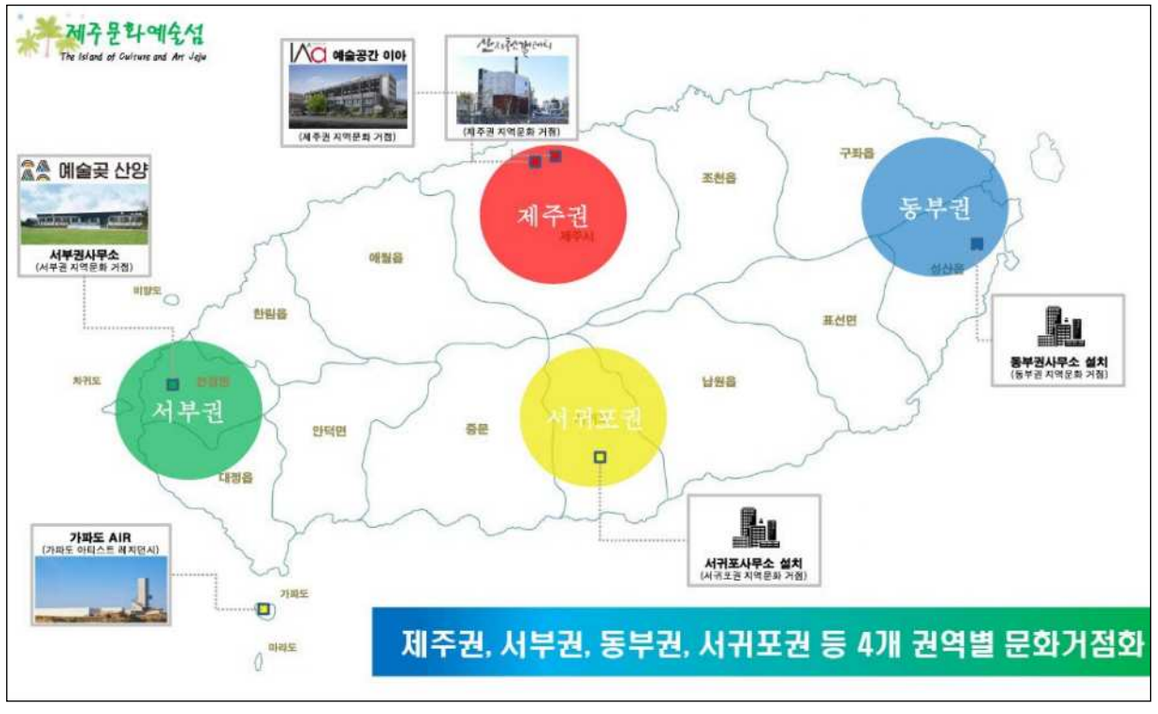
2019년
- 제주 문화예술의 섬 활성화 전략(제주연구원, 2019)
- 제주 도민과 도내예술가, 제주 이주민, 국내의 예술가가 연결되어 함께 예술을 향유하고 즐기는 정책 방향 제안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257조의 3(문화예술의 섬 조성)이 포함된 개정안 국회 통과

2020년
- 제주문화예술섬 프로젝트 추진 부서 미래문화팀 신설
- 인간 문화공간 기초 조사 및 분류(전시, 공연, 독립 서점, 커뮤니티)
- 제주문화예술재단, 제주시문화도시센터, 서귀포시문화도시센터 간 지역 문화 활성화를 위한 제주문화도시협의회 업무협약 체결

제주문화예술섬 프로젝트와 함께하는 기관

지역문화 균형발전
문화예술 스타트업 발굴 및 지원
지역중심 일상문화 활성화
"제주문화예술섬"
문화관광 활성화
지역일자리 창출
문화적 지역재생

제주문화예술섬
The Island of Culture and Art Jeju
2개의 유휴공간 문화재생(S/W)을 위한 공간 선정 및 공간 활용방안 사례
공공건축가
제주문화예술재단
문화기획자
예 술 가
추진단구성
유휴공간 조사 · 공유
유휴공간 현장 실사
대 상 지 협의 · 선정
갤러리
소규모 공연연습공간
예술가 창작공간
어린이 문화놀이터
생활문화센터


제주문화예술섬
The Island of Culture and Art Jeju
예술공간 이아
(제주권 지역문화 거점)
예술곶 산양
서부권사무소
(서부권 지역문화 거점)
제주권
조천읍
구좌읍
동부권
성산읍
동부권사무소 설치
(동부권 지역문화 거점)
애월읍
한림읍
표선면
비양도
차귀도
서부권
안덕면
중문
서귀포권
남원읍
대정읍
서귀포사무소 설치
(서귀포권 지역문화 거점)
가파도 AIR
(가파도 아티스트 레지던시)
가파도
마라도
제주권, 서부권, 동부권, 서귀포권 등 4개 권역별 문화거점화

제주문화예술섬
The Island of Culture and Art Jeju
8개 지역의 민간 문화공간 연계 새로운 문화허브 발굴 및 문화예술프로젝트
① 기획발굴
민간 문화공간 조사 (지역의제, 지역자원 등)
공간발굴 및 협의
공간구성, 공간별 프로젝트 기획
② 공모지원
사업공모 및 설명회
심사 진행
오리엔테이션 및 프로젝트 지원
공연공간 49개
전시창작공간 86개
독립서점 67개
커뮤니티 공간 37개
일정기간 현장에서 문화예술 사업을 진행하는 민간 공간 기획자의 지역 중심 사업을 공공의 영역으로 합류

제주문화예술섬 세부 프로젝트 소개

제주문화예술재단은 '제주 문화예술섬 성 활성화 전략'(제주연구원, 2019) 핵심 과제를 기반으로 세부 실행 과제를 도출해 '2019 제주문화예술섬포럼'을 통해 공개 추진 전략 연구에서 실행한 도민 심층 인식 조사를 바탕으로 세부 프로젝트를 구상했다. 제주문화예술섬의 다섯 가지 과제와 세부 프로젝트, 그리고 홍보 프로젝트는 도민의 목소리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을까?

1.

유휴 공간 활용을 통한 지역 문화 재생

- **비전** 지역의 유휴 공간을 새로이 발굴하고 지역 예술인, 기획자, 주민이 주체가 되어 공간의 예술적 에너지를 일깨우고 창출하는 새로운 문화공간으로 재탄생하기
- **관련 사업** '연결공간 프로젝트'
- **키 비주얼** 공간과 공간을 연결하는 계단을 비주얼 콘셉트의 확장성을 표현

"구도심의 주요 골목에는 어떤 공간들이 있을까?"

2.

문화 거점 기반 지역 문화 활성화

"오래된 가게에서는 몇 년 동안 같은 간판을 걸어 왔을 수 있어요. 간판을 어떻게 보존할 수 있을까요?"

- **비전** 지역에 오래 머물러 온 간판과 같이 존재하는 것으로 '옛것'과 '지역'에 대한 시민 인식 변화를 이끌어 내기
- **관련 사업** '가치:가치 프로젝트'
- **키 비주얼** 문화예술을 매개로 하는 모습을 위트와 재미 요소를 더해 도형으로 표현

3.

읍·면 문화 소외 지역 문화 서비스 확대: 예술요원 연계 프로젝트

- **비전** 지역의 문화적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에서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향유하도록 지역 맞춤형 공연 프로그램 기획하기
- **관련 사업** '예술요원 연계 프로젝트'
- **키 비주얼** 예술 특기자들이 간 해주 대신 특기를 활용해 봉사 활동을 하는 복무 제도에서 착안, 일상처럼 대기 적용

"작은 도서관에서 어린이들이 책을 읽고 있는 모습을 보고 싶어요."

"각 장소에서 다양한 예술가와 문화 활동을 하는 크리에이터 커뮤니티 형성을 통한 네트워킹 플랫폼"

4.

문화예술섬 모집 및 네트워킹 구축

- **비전** 도내로 분산 기획되어 있던 예술인의 정보 활동가, 문화공간 운영자, 문화 정책 전문가, 문화 예술 교육 활동가 등 다양한 이력을 통해 서로 문화 트렌드의 활성화 전략을 공유하며 함께 성장하기
- **관련 사업** '문화거점 지원센터 조성', '스무 살의 로, 제주 문화예술의 가치를 더하다', '2021 제주문화예술섬 비즈워킹 데이, 플랫폼이들 온지점 기념지점은 상상력

5.

문화예술섬 문화 지표 및 과제 발굴

"제주의 도심권과 다양한 주변 동부권과 서귀포권의 생활양식 문화적 특징과 차이점을 파악하여 제주만의 특색있는 문화정책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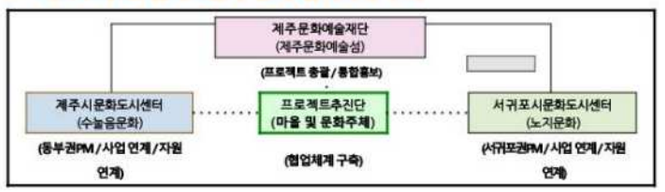
- **비전** 제주 지역 문화 정책의 기반을 바탕으로 문화예술 현장 중심의 정책 모델링을 위한 제주 문화발 문화 환경 및 지역 문화 시설을 조사하고 분석하기
- **관련 사업** '2021 제주문화예술섬포럼 및 문화 정책 개발 연구'

제주문화예술섬 가치 전달 및 참여 유도

- 다년, 제주문화예술섬 프로젝트를 제주 곳곳의 지역 주민들에게 알리고 문화예술 향유자로서 참여 유도하기
- 관련 사업 '공식 서포터즈 '예술섬 CREW'
- 키 비주얼 '다음의 형태를 인체에서 서포터즈들이 하나로 연결되는 모습을 표현

Ⅰ 연결공간 프로젝트

1. 지역주체 및 관계기관과 함께 협력체계 구축



[중문119센터]	
추진단구성	서귀포권 추진단 구성(총 8인), 총 5회 회의
의견수렴	지역주체 의견수렴 총 2회, 마을회장 등
아카이브	지역 아카이브프로젝트 진행(소낭사, 마을 등)
공간연구	공간운영 연구사례조사, 활용방안 프로그램 등)
파일럿프로그램	파일럿프로그램(거리공연프로젝트 총 3회)
파일럿전시	중문아트110展(작가 7명, 총 21점 출품)
공간정비	석면철거, 안전진단, 공간정비 공사 진행
오픈식	총 40명 참석, 예술요원, 청년예술가 공연 등

[조천아학당]	
추진단구성	동부권 추진단 구성(총 8인), 총 6회 회의
의견수렴	지역주체 의견수렴 총 2회, 총 26명 참여
파일럿프로그램	파일럿프로그램 총 5회, 매회 10명 참여
설계및공사	문화공간 설계 및 부분 리모델링공사 완료
오픈식	총 50명 참석, 마을주체 공연, 활동가 시상식

2. 추진체계

3. 프로세스

- 지역주체 의견반영
- 지역주체 역량강화 프로그램
- 공간조성 및 문화공간 오픈

Ⅰ 연결공간 프로젝트

1. 지역주체와 함께 지역의 유휴공간을 문화재생을 통해 새로운 문화공간으로 조성

- 지역의 유휴공간을 문화재생을 통해 새로운 문화공간으로 조성
- 동부권, 서귀포권 등 권역별 문화공간 발굴을 통해 지역문화 균형발전

□ 사업개요

- ❍ 사업명: 〈연결공간 프로젝트〉유휴공간 활용을 통한 지역문화재생사업
- ❍ 사업기간: 2021년 1월 ~ 12월
- ❍ 협력기관: 제주시문화도시센터, 서귀포시문화도시센터
- ❍ 사업비: 300,000천원
  - 동부권: 150,000천원(제주시문화도시센터 연계 추진)
  - 서귀포권: 150,000천원(서귀포시문화도시센터 연계 추진)

구분	건축물 명칭	건축면적	층 수	공간사진
동부권역 (조천리)	조천읍 아학당 (2009준공)	178.3㎡	지상 2층	
서귀포권역 (중문동)	구중문 소방서 (1985준공)	554.6㎡	지상 3층	

JFAC 제주문화예술재단

Ⅰ ㄱ、치_가치 프로젝트

□ 문화거점 기반 지역문화 활성화 〈ㄱ、치_가치 프로젝트〉

- 제주문화예술섬 조성을 위해 민간 문화공간 협업프로젝트 추진
- 도내 다양한 민간 문화공간 기획프로젝트 지원으로 지역문화 활성화 도모

□ 사업개요

- ❍ 사업명: 지역문화의 미래를 함께 실험하는〈ㄱ、치:가치 프로젝트〉
- ❍ 사업기간: 2021년 1월 ~ 12월
- ❍ 사업비: 285,000천원
- ❍ 추진방식: 민간 문화공간 대상 기획프로젝트 공모 지원방식
  - 지원규모: 총 285,000천원
  - 지원금: 최대 50,000천원 내
  - 지원원칙: 2개 이상 민간 문화공간 컨소시엄 필수
  - 지원내용: 민간 문화공간과 지역을 무대로 하는 문화기획프로젝트
- ❍ 선정결과: 총 7건(15개 민간공간)

총계	권역별							
	제주권역		서귀포권역		동부권역		서부권역	
7건	2건	29%	1건	13%	2건	29%	2건	29%

JFAC 제주문화예술재단

ㄱ、치_가치 프로젝트

□ 같이, 가치롭게 지역문화의 내일을 실험하다

지역의 문화공간이 협업해 지역 자원을 연결한다면 어떤 새 바람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ㄱ치:가치 프로젝트'는 민간 문화공간과 함께 제주도 지역 문화의 미래를 실험하는 프로젝트다. 프로젝트의 가장 큰 차별점은 민간 문화공간 두 곳 이상이 협업하는 컨소시엄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이다. 총 7팀의 컨소시엄이 2021년 하반기에 함께, 가치로운 제주의 문화예술을 확산시킨 'ㄱ치:가치 프로젝트'는 2021 12월 3일 제주시소통협력센터에서 열린 '2021 ㄱ치:가치 프로젝트 성과 공유회'를 통해 결과물을 공유하고 다음 사업의 방향성을 모색하며 첫해 사업을 마무리했다.

'ㄱ치:가치 프로젝트'의 주역들

사업주관 · 고치가게 파트너 · 프로젝트 기획 진행 · 가치찾게 파트너 · ㄱ치:가치 프로젝트

'ㄱ치:가치 프로젝트, 어떤 의미일까?'

□ 7개 팀 선정

1. 댓돌웜팡으로 되살아나는 공동체 문화, 댓돌웜팡
2. 예술자연활동 온도
3. 시금 여기! 콜라보레이션 아트로(路)
4. 시야, 너는 참 아름답구나!
5. 찾고, 연결하여 만드는 문화 소셜 다이닝 제주예찬
6. 문딱 × 노리왓 문화예술학교
7. 남원예술순력도

제주문화예술 정책 포럼

스무 살의 꿈, 제주 문화예술의 가치를 더하다

2021년 5월 14일, 창립 20주년을 맞이한 제주문화예술재단의 현재와 미래를 모색하고 '문화예술섬 제주'를 만들어가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기 위한 '2021 제주문화예술섬 상반기 포럼: 스무 살의 꿈, 제주 문화예술의 가치를 더하다'가 개최됐다.

주요 세션 구성

세션 구성	세션 핵심 가치	세션 주제
특별 세션 지역 문화계	참여와 소통	위드 코로나 시대,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꿈꾸다
세션 1 창립 20주년 연계	포용과 혁신	스무 살, 새로운 만남과 모험을 꿈꾸다
세션 2 네트워킹	연결과 공존	제주 청년들, 슬기로운 문화예술을 꿈꾸다

일시 2021. 5. 14(금) 14:00~18:00

장소 제주 산지천갤러리 코워킹 스페이스

주요 행사 특별 세션(지역 문화계) / 세션 1(창립 20주년 연계) / 세션 2(네트워킹)

부대 프로그램 재단 20주년 축하 메시지, 축하 공연, 오픈 채팅 등

특별 세션

참여와 소통: 위드 코로나 시대,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꿈꾸다

특별 세션에서는 '참여와 소통'이라는 핵심 가치를 기반으로 지역문화예술계와 문화 정책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 도내 문화예술 단체인 한국예총특별자치도연합회와 제주민족예술인총연합의 2021년 활동 계획과 방향성을 공유함으로써, 지역문화예술계와 문화 정책이 함께 호흡하고 소통해 코로나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을 모색했다.

세션 참여자 모더레이터 이선화(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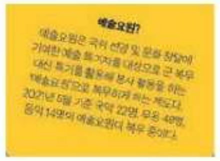
패널 김선영(한국예총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 회장)
이종형(제주민족예술인총연합 이사장)
김수열(한국작가회의 부이사장)
홍효진(제주특별자치도 문화정책팀장)

Point Talk

예술요원 연계 프로젝트

□ 읍·면 문화소외지역 문화서비스 확대 〈예술요원 연계 프로젝트〉

- 제주문화예술계 산남·산북의 문화적 불균형 해소
- 읍·면 등 문화소외지역 균등한 문화참여 기회 제공



□ 사업개요

- ❍ 사업명: 2021 읍·면 문화소외지역 문화서비스 확대[예술요원 프로젝트]
- ❍ 사업기간: 2021년 1월 ~ 12월
- ❍ 사업대상: 읍·면 지역 제주 도민 외
- ❍ 사업비: 40,000천원(도비)
- ❍ 권역별(제주권, 서귀포권, 동부권, 서부권) 균형있는 공연 프로젝트 운영 도내 기획자와 예술요원이 공동기획하는 읍·면·동 지역 밀착형 공연

JFAC 제주문화예술재단

네트워킹 데이(문화예술 포럼)

2021 제주문화예술섬 네트워킹 데이

돌연변이들: 경계를 가로지르는 상상력

제주문화예술섬 네트워킹데이는 지역 곳곳에서 문화예술의 첨병처럼 활동하는 예술가, 기획자, 활동가, 교육가 등을 연결해 문화예술로 소통하고 교류하는 축제로 올해 첫 행사를 개최했다. 첫 번째 네트워킹 데이의 주제는 '돌연변이들: 경계를 가로지르는 상상력'이다.

장소 제주시소통협력센터, 오각집, 펜지리맨션
일정 2021년 12월 14일~16일(3일간 진행)

Day 1 연결하기+협업하기

10시 **개회** 환영 인사 및 인사말, 공로패 시상

10시 30분 **라운드테이블 1. 전라제주권 광역문화재단협의회 '2022년 협업 사업 기획'**

전라제주권 광역문화재단협의회 소개와 함께 각 문화재단 주요 사업과 전라제주권 공동 사업을 발표하고 광역문화재단 문화 예술 네트워크 형성의 기회를 마련했다.

13시 **라운드테이블 2. 좀 더 풍요로운 문화예술섬**

제주 문화기관 리더를 초대해 좀 더 풍요로운 제주문화예술섬을 만들기 위한 아이디어와 전략을 공유했다.

14시 30분 **라운드테이블 3. 좀 더 솔직한 문화예술섬**

도내 예술가, 큐레이터, 문화공간 대표, 기획자 등 현장에서 가깝게 문화예술을 실천하는 주체를 초대해 조금 더 직접적이고 솔직한 문화예술 현장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16시 10분 **오픈 워크숍 1. 민관협력(PPP)형 공공시설 재생의 스타트라인**

전라북도 군산시 시민문화회관을 민관협력형 도시 재생으로 시민 중심의 공공 문화예술 공간으로 탈바꿈하고 있는 '프로젝트 거인의 잠' 사례를 바탕으로 유휴 공간의 역할을 정의하고 매력적인 동네를 만드는 전략을 공유했다.

발표3

새 정부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언

라도삼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Ⅰ. 코로나, 엔데믹, 지역의 변화

1. 118,504명. 2022년4월19일 하루 발생한 코로나 확진자 수다. 2020년2월29일 최초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한지 2년이 약간 지난 시점에서 코로나는 우리 사회를 악몽으로 몰아넣었던 팬데믹에서 엔데믹으로 진화했다. 정부는 4월18일부터 마스크를 제외한 모든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없앴다. 사적모임 인원,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도 사라졌고, 행사·집회는 인원 수 제한 없이 개최할 수 있게 됐으며, 영화관·공연장에서의 취식도 가능해졌다. 형식적으로는 코로나로부터 벗어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 지난 2년, 사회적 거리두기로 많은 것이 곤란을 겪었다. 대면을 바탕으로 하는 문화와 예술은 그 영향정도가 더 심하다. 공연과 시각 등 장르 예술 전반이 심각한 피해를 보았을 뿐만 아니라, 지역을 매개로 한 생활예술이나 마을예술 또한 마찬가지의 피해를 받았다. 지역관광은 더 말할 필요가 없다.

3. 그러나 위기가 단지 위기였던 것은 아니다. 이 위기로 인해 예술과 지역 모두 새로운 변화의 계기를 찾았다. 우선 예술은 디지털과 온라인을 현실로 받아들이며 서서히 변화를 찾아가고 있다. 급속도로 발전하는 가상현실 기술과 네트워크 기술은 '메타버스'(metaverse)라는 새로운 공간을 의제화시켰고, NFT라는 새로운 교환과 투자체계가 생겨나며 시장도 규모를 키우며 변해가고 있다. 2021년 우리나라 미술시장은 무려 1조원에 달한다 한다.

4. 지역 현장 또한 마찬가지다. 도시재생으로부터 불기 시작한 변화의 바람은 문화도시를 경과하며 지역의 문화를 바꾸는 거대한 바람이 되었다. 지역사회 내 문화계획의 틀이 달라지고, 기획의 역량이 달라진다. 주민참여의 거버넌스가 일상화되고, 취약지역이 지역을 변화시키는 거점이 된다. 이제 지역은 갖가지 이슈로 호명된다.

5. 사실 이런 호명은 비단 문화도시로 비롯된 것은 아니다. MZ세대를 중심으로 이미 많은 청년들이 지역으로 귀환하여 활동하고 있다. 노후되고 버려진 장소, 공장, 창고와 같은 시설은 그들이 놀기 좋은 놀이터다. 세련된 감각으로 디자인된 인테리어와 숙련된 커피와 파스타 기술은 새로운 곳을 헌팅하고 판촉하길 좋아하는 블로거와 인스타노동자들을 대거 불러들였다. 이들에 의해 지역은 아무리 외진 장소라 하더라도 멋진 명소가 되었고, 그 자체로 지역은 브랜딩되었다. 지금도 지역 곳곳을 누비는 블로거와 인스타 노동자들이 많다.

6. 이로 인해 지역은 놀랍게 변해가고 있다. 하나 둘 컨셉화(conceptualization)되며 자신을 정체(identified)하기 시작한다. 과거 각 지방정부가 애써 노력해 지역을 컨셉화하며 정체화했다면,[1] 오늘날엔 민간영역-여기엔 재단도 포함된다-에서 자연스럽게 자신의 컨셉을 만들어 간다. 지역은 하나의 멋진 소비공간으로 변해가는 것이다.

7. 그런데 과연 이게 지역민의 삶과 관계가 있는 것일까? 사실 지역의 문제는 판촉의 문제와 다르게 심각하다. '벚꽃 엔딩'으로 얘기되는 '지방소멸'은 지역의 현실을 그대로 말해준다.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현 상황이 지속될 경우, 2020년 대비 2040년 인구가 증가하는 곳은 18.96%에 지나지 않고, 80.83%는 인구감소가 일어날 것이라고 말한다.[2] 지방소멸은 지역의 현실인 것이다.

<표 1> 2040 전국 격자단위 인구증감 현황(2020년 대비) 단위 : 격자수

인구감소 (2020년 대비 감소)	인구유지 (2020년과 동일)	인구증가 (2020년 대비 증가)	인구소멸 위험 (2020년 인구거주 →2040년 무거주)	총 인구거주 (2020년 인구거주)
15만9,917 (80.83%)	24 (0.01%)	3만7,514 (18.96%)	401 (0.20%)	19만7,856 (100%)

8. 이처럼 급격한 소멸위기를 겪고 있는 지방의 현실에서 지역문화는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칠까? 〈지역문화진흥법〉 제2조 정의에 따르면 지역문화는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또는 공통의 역사적·문화적 정체성을 이루고 있는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유산, 문화예술, 생활문화, 문화산업 및 이와 관련된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지역을 모티브로 형성된 역사와 예술, 생활문화, 문화산업 관련 활동이 지역문화라는 것이다.

   때문에 지역문화는 단지 지역을 소비한다고 해서 만들어 지는 것은 아니다. 지역민의 생활 속에서 역사와 예술, 생활문화, 문화산업 등이 살아있을 때, 지역문화는 비로소 활성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본격화되는 지방소멸의 시대, 지역문화는 과연 어떻게 활성화 될 수 있는 것일까?

1) 지역축제나 Hi-Seoul과 같은 브랜딩이 그 대표적 예라 할 수 있다.

2) 국토연구원은 전국을 500m격자 단위 코호트 오앤법을 적용해 전국의 인구변화추이를 조사했다.(이보경, 2040년 장래인구 분포전망 연구, 국토연구원, 2019, p.25

Ⅱ. 새 정부의 탄생과 지역문화정책 과제

9. 새 정부가 탄생했다. 문재인 정부처럼 별다른 컨셉 없이 당선자 이름으로 명명될 것 같은 윤석렬 정부는 아직 인수위 과정이 끝나지 않은 상태로 문화정책뿐만 아니라 모든 정책에서 그 방향을 쉽게 노출하고 있지 않지만, 지난 3월30일에 열린 〈2022년 제1차 강원문화포럼〉에서 발제된 내용으로 그 방향을 다소 볼 수 있다. 당시 포럼에 참석한 정광렬 박사(문화가치연구소장)는 새 정부의 문화예술정책의 기본방향을 설명한 바 있는데, 그것은 △4차 산업혁명 대응, △문화예술의 자율성 보장과 구조혁신, △문화기본권 보장, 지역중심 문화자치, △민간시장 자율성 맞춤형 지원 강화, △K-컬쳐를 글로벌 문화의 미래발전(이 문장은 PT 그대로 인용), △COVID19 위기극복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2> 새 정부 문화정책 기본방향 ※ 출처 : 2022년 제1차 강원문화포럼, 정광열 발제문

방향	내용
4차 산업혁명 대응	창의융합 중심 구조혁신을 통한 지속가능한 문화생태계 조성 문화예술교육 ICT 문화공간화, 메타버스 가상공간/관광/문화유산
문화예술의 자율성 보장과 구조혁신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라는 원칙 실현을 위한 구조혁신 다년간 선택과 집중 지원 위주 전환, 지역문화규제혁신/콘텐츠 개발/일자리
문화기본권 보장 지역중심 문화자치	상향식 지역문화진흥계획, 문예기금 지역배분 확대, 지역/수요자 중심 전달체계, 문화도시 확대/추진방향 개선, 지역을 문화생산지로 조성
민간시장 자율성 맞춤형 지원 강화	민간의 창의성 중심, 정부의 인프라/규제혁신/공정성 제고 예술인 안정망 조성(고용보험, 체불예술인 보호), 문화바우처 지원 확대
K-컬쳐를 글로벌 문화의 미래발전	한류의 글로벌 문화의 중심으로 확산하는 미래지향적 전략 민간주도 및 정부지원
코비드 19 위기 극복	막대한 피해로 생존위기에 놓여 있는 문화예술계의 회복지원

10. 이 중 지역문화와 관련 있는 것은 문화기본권 보장과 지역중심 문화자치인데,[3] 주요한 이슈는 △상향식 지역문화진흥계획, △문예기금 지역배분 확대, △지역/수요자 중심 전달체계, △문화도시 확대/추진방향 개선, △지역을 문화생산지로 조성 등이다.

3) 다른 것과 달리 이 항목만 두 개의 다른 주제인 문화기본권과 지역문화가 하나로 묶여있다. 문화기본권을 지역중심으로 이루겠다는 의도인 지 아니면 편의상 묶은 것인지는 알 수 없다.

11. 기본방향으로 설정된 '문화자치'는 문재인 정부의 문화비전인 〈문화비전 2030, 사람이 있는 문화〉에서 이미 천명한 바다. 〈창의한국〉을 잇는 새로운 문화비전으로 수립된 〈문화비전2030, 사람이 있는 문화〉는 9대 의제 중 하나로 '지역문화분권 실현'(의제6번)을 제시하고, △지역 문화자치를 위한 기반 조성, △지역문화의 고유성 유지·발전, △지역문화 거점기관 운영혁신과 지원체계 마련, △문화협치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지속가능한 지역관광 생태계 구축, △생활체육 활성화 방안 마련 등을 대표과제로 제시한 바 있다.

12. 문재인 정부가 문화분권을 위한 기본방향을 제시했다면, 윤석렬 정부는 그의 실질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읽힌다. 실제 새로운 내용을 제시했다기 보다는 기존에 하고 있는 일을 개선하거나 개편하는 데 중점을 두었기 때문이다.

13. 우선 지역문화진흥계획을 상향식으로 바꾼다는 것은 그간 논의되었던 것이라 더 말할 필요는 없겠다.[4] 문예진흥기금 지역배분 강화나 지역·수요자 중심 전달체계 강화 또한 긍정적으로 보인다. 그러나 사업자체가 이양-권한, 예산, 인력-되는 방식이 아닌, 정부-문화예술위원회 포함-의 일을 지역에 떠넘기는 방식이거나 공모 등을 통해 지역을 경합시키는 방식은 지역문화의 활성화와는 무관한 업무이관이거나 민원처의 이관으로 보일 수 있다.

14. 문화도시의 확대 추진과 추진방향 개선은 다른 페이지로 설명되어 있다. 설명 자료에 따르면, 전국이 문화도시 열기에 빠져 있어 과열양상이 있으며, 문화도시 전문가의 품귀현상이 나타나는 한편, 그들만의 리그가 펼쳐지는 양상이 있어 법적으로 지정된 문화도시가 지속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든다는 것이다. 다만, 문화적 관점에서 도시읽기와 지방행정체계의 변화, 시민주도 활성화 등 문화도시가 이룬 성과로 여러 모로 주목받는 만큼 히트 정책으로 지속가능성은 예측된다고 의견도 덧붙였다.

4) 이의 문제는 이동훈, 상향식 사업구조로의 변화를 위한 입법정책적 전략, 2021년 전국지역문화재단연합회 정책포럼, 2021을 보면 정확히 알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필자 또한 2016년 문제인 정부 출범 당시 상향식 계획수립으로 구조화 되어 있는 <지역문화진흥법>의 지역문화진흥계획 수립체계를 신랄하게 비판한 바 있다.

<표 3> 문화도시 현황과 현상 ※ 출처 : 2022년 제1차 강원문화포럼, 정광열 발제문

방향	내용
전국이 문화도시 열기	- 2021년 예비문화도시 신청 지자체 49개 도시 - 2021년 예비문화도시를 준비하는 지자체는 70~80여개 도시
과열과 경쟁 현상	- 도시 간 경쟁의 심화와 인구 규모가 다른 도시 간의 불공정 문제 노출 - 기초 지자체 예산 편중 현상
문화도시 전문가 품귀현상	- 문화도시 전문집단 모시기 경쟁 및 용역 금액의 상승 - 유사 전문가들의 등장
문화적 관점에서 도시읽기 확장	- 도시정책에서 도시기본계획을 문화적으로 재해석하는 시선 확장 - 축제, 관광 등 문화정책 관점에서 삶의 문제를 중심으로 도시 읽기 확산
지방 행정체계의 변화 현상	- 부서 간 협력을 강조하는 가이드로 인한 행정체계 변화 시도 - 민관 거버넌스 협력체계 시도
시민주도 거버넌스 활성화	- 대규모 시민 논의 구조 조직화 - 청년, 예술가, 여성 역할 확장과 민간 활동의 공공화
문화도시 미래에 대한 의문	- 법적으로 지정된 문화도시가 지속될 것인가에 대한 의문 - 히트 정책으로 지속가능성 예측

15. 마지막으로 내놓은 지역을 문화생산지로 조성한다는 개념은 혁신적이다. 인구소멸과 노후화 등으로 점차 소비의 대상으로 전락(?)하고 있는 지역의 현실을 고려할 경우, '지역을 문화의 생산지로 만든다'는 것은 구호일지라도 비전 혹은 정책방향의 가치로서 의미가 있다. 다만, 그 구체성이 전혀 채워지지 않을 경우 단순한 수사(rhetoric)가 될 우려가 있어, 세부적인 내용이 어떻게 채워질 것인가에 대해선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Ⅲ. 새 정부 지역문화정책의 방향

16. 코로나 이후 사회가 많이 변화했다. 아마도 새 정부는 코로나 이후 닥쳐 올 새로운 표준(New Normal)에 맞는 정책 혹은 새로운 표준을 만들어 가는 정책을 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 점에서 지역 문화정책 또한 변화된 상황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전개될 필요가 있다. 이에 현재 우리 사회에 나타나고 있는 변화된 양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7. 우선, 디지털화는 예술과 문화정책 내에서 가장 주목해 보아야 할 요소다. 가상현실 기술과 AI, 로봇 기술로 발전하는 디지털 기술은 다양한 디스플레이 장치와 온라인을 만나며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메타버스'라는 새로운 공간을 창출하고 있다. 이곳은 새로운 기회를 창출한다. 아날로그-물리적 현실계-로는 하지 못했던 다양한 복원 작업이나 자신을 표출하는 활동이 가능해지며, 내가 아닌 사이버 개체-아바타-가 나를 대신하여 나의 욕망을 실현하고 구현한다. 이 점은 지역문화 관점에서 또한 주목해 보아야 할 점이다.

18. 무엇보다 디지털화나 디지털 복원과 같은 현실계를 가상세계로 전환시킬 준비를 해야 한다. 아마 이 작업은 2020년대 들어 가장 필요하고 현실적인 작업이 될 것이며, 국가 및 각 지방자치 정부의 주력 업무가 될 것이다. 이 점에서 지방자치정부나 지역문화재단은 얼마나 준비하고 있는지 아직은 알 수가 없다. 디지털화는 시대를 총괄하는 국가의 의제인 만큼, 정부와 협력하여 각 지방정부가 철저히 준비해야 할 것이다.

19. 더불어 디지털 격차 해소 또한 중요한 의제다. 필자가 접해 본 예술계뿐만 아니라 시민사회 대부분은 디지털에 대해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관심있는 예술가나 시민은 NFT를 포함하여 다양한 디지털 활동에 과감히 참여하나 대부분의 사람은 아예 거리를 두거나 관심을 갖지 않으려는 경향을 지니고 있다. 변화가 오고 있음을 아나, 그 변화에 대응해야 한다는 긴장감이 오히려 디지털이나 온라인 활동을 주저하게 만드는 것이 현실이다. 이것은 마치 산업주의 초기 형성된 '러다이어트 운동'(Luddite Movement)과 같은 것이다. 그런 점에서 예술계 및 시민사회 내에서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고, 새로운 활동공간으로서 디지털과 가상세계를 받아들이는 노력 또한 같이 경주해야 한다.

20. 기후위기와 같은 새로운 가치관 또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SDGs, ESG, RE100, 탄소제로 등 다양한 언어와 담론으로 기후위기는 각종 정부 정책 및 기관운영을 구속하는 현실이 되었다. 앞으로 이에 대응하지 못하는 한 지역문화 또한 살아남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특히 각종 축제와 행사로 인해 발생하는 과다한 에너지 소비와 쓰레기 발생 등은 기후위기 관점에서 직접적인 타격대상이다. 기후위기라는 큰 가치체계에서 사회 전체가 그 행동을 전환하고 있는 만큼, 지역문화 또한 좀 더 적극적인 관점에서 기후위기를 의제화하고, 전략화하며 실천하는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 이 또한 향후 문화정책 의제 중 핵심 정책이 되거나 되어야 할 것이다.

21. '공정과 상식'이라는 시대가치 또한 정파와 관계없이 주목해 보아야 할 부분이다. 비교적 이 시대가치는 10년을 단위로 갱신되는데, 2000년대를 이끌었던 신자유주의와 2010년대를 형성했던 공동체주의에 뒤를 이어 향후 10년을 이끌 이 이데올로기는 '공정한 경쟁'이란 이름으로, 우리 사회를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예술지원에서의 공정, 누구나 적절한 기회를 보장받는 공정함 등 예술계 및 시민사회, 지역문화 전반에는 이 공정과 상식이라는 새로운 이데올로기가 침잔될 것이다. "동일하지 않는 각 지역이 어떻게 '공정한 경쟁'을 할 것인가?" "공모는 과연 공정한 것인가?" 많은 것들이 논란될 것이고, 답을 기다릴 것이다. 이에 어떻게 대비해야 할 것인가는 지역문화 정책에 있어 중요한 과제다.

22. 축소사회 또한 앞에서 지적했던 것처럼 지역문화가 대비해야 할 중요한 과제다. 인구수는 급격히 줄어들며 수도권으로부터 먼 지방부터 점차 소멸하기 시작한다. 이 소멸된 지역은 어떻게 될 것인가? 또 소멸을 막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가?

    더불어 주목되는 것은 1인 가구와 고령인구 증가다. 사실 1인 가구의 대부분은 고령인구고, 이들은 단절된 네트워크 속에 고독하게 마지막을 준비하는 경향이 있다. 가족과 분리되고, 사회와 분리된 고령인구를 어떻게 지역 사회 내에 연결하며 하나의 가족으로 살아가도록 할 것인가? 이제 초등학교 중심의 예술교육이 문제가 아니다. 고령사회를 대비하는 지역전략과 문화전략이 있어야 한다.

23. 인간다운 삶을 추구하는 삶의 태도변화와 새로운 사회적 관계망에도 대비해야 한다. 과거 도시나 지역이 폭발하는 인구를 수용하고 이동을 편리하게 하는 공간이었다면, 앞으로 도시나 지역은 인간다운 삶을 추구하는 시민들의

욕구와 욕망을 처리하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 공원과 거리, 광장, 카페 등 사회적인 활동이 이루어질 다양한 공간을 창출해 필수적인 활동 외에 커뮤니티 활동과 커뮤니케이션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도시와 지역을 조정해야 한다. 각 지역에 난립하고 있는 아파트와 폐쇄적 단지, 이동의 편리를 돕는 외곽순환도로와 고속 교통수단이 지배하는 현실에서 각 지역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이 또한 앞으로 지역문화 형성 및 활성화와 관련하여 주목해서 논의해야 할 부분이다.

24. 관련하여 탈도시화 또한 주목해 보아야 할 의제다. 고령화와 인간주의적인 삶의 강조, 번 아웃된 MZ세대, 새로운 기회와 일거리의 창출 등 다양한 이유로 여러 사람들이 지역 사회 내에 자리를 잡고 있다. 그 형태 또한 점적인 개인에서 집단화·공동체화 되는 양상이다. 이 변화에 지역은 또한 대응해야 한다. 이들을 어떻게 수용하고 활용할 것인가의 문제부터 이들로 인한 지역사회의 변화 등을 다각도로 분석해야 하며, 이로부터 새로운 지역문화를 창출해야 한다.

25. 이처럼 지역의 변화를 유도하는 요인들은 매우 많다. 부정적으로는 지방소멸로부터 새로운 사회체계인 디지털의 수용과 기후위기, 공정과 상식이라는 새로운 경쟁의 개념을 수용해야 한다는 의제가 제기되며, 지역민의 인간다운 삶과 도시체계의 요구, 이탈하는 도시민과 그들로 인한 지역사회의 변화 또한 주목해야 할 과제다. 이런 과제들은 향후, 2020년대를 지배하는 지역문화의 의제가 될 것이며 이에 대한 대비가 있어야 2020년대의 변화를 조망하며 현실적인 대응방안을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다.

Ⅳ.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

26. '소멸'과 '소비'. 지방을 중심으로 한 지역은 앞으로 이 두 단어에 시달릴 것이다. 지방은 소멸되며, 소비의 공간으로 전환된다는 논리와 현실이 지방 지역을 지배할 것이라는 얘기다. 여기에 윤석렬 정부는 수사인지 모를 '문화분권과 자치'를 기본방향으로 내세웠고, '지방을 문화생산지로 만들겠다'는 거창한(!) 구호도 외쳤다. 이제 그에 맞는 성과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을 제안해 본다.

(1) 정책기조 또는 방향

27. 우선 전반적 정책기조차원에서 새 정부에 바라는 것은 두 가지다. 그 하나는 '분권 자치'고 다른 하나는 '문화다양성과 지역문화'다.

28. '분권과 자치'는 그들이 내세운 것처럼 지역 스스로 자기결정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 스스로 권한과 결정권을 줬을 때 그 성과가 어떻게 나는지는 지금의 문화도시에서 보여주는 것과 같다. 다양한 주민과 관계하며 각 지역은 자신의 비전과 컨셉에 맞는 지역의 문화와 네트워크를 만들어 가고 있다.

29. 때문에 분권과 자치는 매우 중요한 과제다. 그러나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문화정책의 이상한 구조와 체계에 대한 것이다.

30. 알다시피 문화정책은 이원화 된 구조로 형성되어 있다. 정부와 〈문화예술위원회〉, 지방정부와 〈문화재단〉이 가장 기본적인 뼈대를 형성하고, 여기에 〈문화예술교육진흥원〉, 〈예술인복지재단〉, 〈지역문화진흥원〉 등 여러 정부기관들이 수직적 위계 구조 위에 수평적으로 펼쳐져 있다. 문제는 이 기관들이 모두 지역의 문화재단을 자신의 정책전달체계로 사용한다는 점이다. 사업은 기획은 자신들이 하고, 지역문화재단은 여기에 '공모' 혹은 '위탁'의 방식으로 동원된다. 비교적 지자체의 재원으로부터 원활한 운영이 힘든 지역의 문화재단은 이 곳 저 곳의 다양한 사업에 참여하게 되고, 그 결과 자체 의사결정은 커녕 위탁사업 쳐내기도 급급한 구조가 만들어 진다. 이 상황에서 분권과 자치가 일어날 수 있을까?

31. 이에 정부가 대응하는 방식은 별도의 센터를 설치하는 것이다. 문화도시 사업이 대표적이다. 문화도시는 사업계획 단계부터 별도의 전문화 된 조직을 설치하여 사업에 참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업의 수월성과 성과 제고를 위해서는 필요한 일이라 판단되나, 이 경우 지역에 또한 다양한 수평적 기관들이 늘어난다. 중앙정부 차원에선 큰 문제가 아닐 수 있으나, 지역의 입장에서 이처럼 행정기관이 늘어나는 것은 적절한 것은 아니다. 어차피 그 모든 기관이 결국엔 지역에서 책임을 져야 할 것들이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이 이원화 된 정책-사업전달체계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와 지역의 자발적인 정책구조를 어떻게 형성할 것인지에 대해 동시에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것 없이 이루어지는 사업의 이양이나 업무의 이관은 재단 등 지역 내 문화정책 주체들의 업무만 가중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32. 두 번째 방향은 '문화다양성과 지역문화'다. 많은 사람들이 '문화다양성' 하면 소수집단이나 이주민을 생각하지만, 엄밀히 말해 문화다양성은 문화민주주의를 형성하는 바탕으로 각 집단이나 지역의 문화가 왜곡 없이 한 사회의 문화체계 내로 반영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이 문화민주주의를 위해서는 문화다양성이 필수적으로 전제되어야 한다.

33. 그러나 현재 문화다양성은 이주민 정책에 제한되어 있는 상태다. 그것도 동질감 형성이라는 관점에서 추진될 뿐, 다양한 집단의 자기노출과 표현이라는 본래의 취지에는 다가가지 못한 상태다. 이것을 어떻게 변환시킬까? 다양한 집단, 지역의 문화가 표출되고. 선택되어 소비되며, 새로운 형태로 생산되지 못하는 한 지역이 문화생산지가 되리라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 지역이 문화의 생산지가 될 수 없다. 지역은 커피와 파스타가 판매되는 인테리어의 공간이자 도시민의 소비처일 뿐이다.

34. 이런 측면에서 지역문화정책은 근본적 변화가 필요하다. 지역에 사업을 내려 지역을 활성화시키는 방식이 아니라 지역이 자발해 사업을 기획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하며, 각 지역의 문화가 우리 사회의 문화주체로 구성될 수 있도록 변화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 지역을 바라보는 관점부터 여러 정책 틀까지 많이 변해야 한다.

(2)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전환 전략

35. 첫째, 정책의 전략이 바뀌어야 한다. 정부는 전반적 가이드만 제시할 뿐 각 지역이 사업을 기획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바뀌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문화진흥계획 수립 체계를 근본적으로 혁신해야 한다. 각 기초가 지역문화진흥계획을 수립하고, 광역이 이를 모니터링하고 종합해 광역문화진흥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이어 정부를 이를 종합하는 지역문화진흥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36. 정부의 중요한 역할은 사업 재원 마련과 이를 모니터링 하는 체계, 문체부 산하 각 기관에 해당 사업추진을 분산해 주는 시스템이다. 문체부는 우선, 각 지역이 사업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한 재원 범위를 제시하고 이에 적절한 사업이 구성되었는지 모니터링 해야 한다. 또한 그 계획의 집행과정을 모니터링 해 지역사회와 더불어 계획추진이 적절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압박해야 한다.

더불어 각 지역에서 수립된 사업은 해당 사업영역에 따라 〈문화예술위원회〉, 〈지역문화진흥원〉 등 각 기관으로 보내 해당 기관에서 관리하고, 체계화 할 수 있도록 정책체계를 바꿀 필요가 있다. 요컨대 문체부가 사업 및 정책기획 기관이 아닌 정책의 협력 플랫폼이 되어야만 지역의 문화는 살 수 있다는 얘기다. 아직도 모든 사업을 조율하고, 공모와 위탁을 통해 지역문화재단을 동원하여 자신의 정책목표를 달성하겠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가장 낙후된 방식의 정책체계를 연명시키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그 어떤 부처도 집행기관을 따로 놓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팔길이'만 외칠 것이 아니라 그에 맞는 적절한 행정체계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예술도 그렇지만, 지역도 정부의 변화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

37. 둘째, 재원의 안정화다. 이 재원의 안정화는 중앙정부의 재원으로 충당하는 방식도 있지만, 각 지방정부 예산 중 일정비율을 확보하여 충당하는 방식도 있다. '팔길이 원칙'에 의해 예술정책이 예술인 스스로 결정하는 '위원회' 구조로 변경되었듯, 지역의 문화예산 범위를 엄밀히 정하고 해당 예산만큼을 재단에 출연하도록 '의무화'하거나 '협약'하는 방식도 가능할 것이다. 예컨대 정부 예산의 몇 퍼센트를 문화예술기금으로 출연한다거나 하는 방식과 유사한 형태로, 정부도 그 틀을 변화시키고 각 지방도 그렇게 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그래야만 안정적인 지역문화 예산이 확보될 수 있을 것이다.

38. 셋째, 시대의제로 닥친 기후위기나 디지털화, 고령화 및 1인 가구화, 귀향과 귀촌 지원 등 지역을 둘러싼 새로운 의제에 대응할 수 있는 구조 또한 형성할 필요가 있다. 특히 향후 지역 사회 내에서 생활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형태의 문화적 권리와 도시권에 대한 보장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단지 지역문화가 아니라 지역 내에서 사람이 살기 위한 최소한의 권리다.

40. 그런 점에서 문화영향평가제에 대한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 현재의 문화영향평가는 '문화'의 개념규정부터 평가항목의 구성, 평가방식, 평가대상 등에서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특히 문화도시를 대상으로 한 문화영향평가 시행은 정부 목표치인 수를 충족시킬 뿐, 사회적 영향력과 문화의 가치를 제로화 시키는 일에 다름 아니다. 새 정부 문화도시 평가에서 언급되었던 것처럼, 도시 내에 문화에 대한 시각을 반영시키기 위해서는 도시계획을 포함하여 지역 내 다양한 정책사업과 계획에 대해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더불어 그것은 전문가가 아닌 각 정책담당자가 자기 인식 하에 평가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변해야 하며, 최소한의 범위에서 중요한 정책과 계획에 대해 모니터링하고 이에 대응하는 문화전략을 발굴하는 방식으로 평가의 방식과 체계 또한 변해야 한다. 문화영향평가는 〈문화기본법〉에 의한 법정 평가다. 그만큼 문화영향평가를 잘 활용하며 지역 정부가 야기하는 지역사회의 변화와 문화영향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5)]

5) 보다 자세한 내용은 라도삼·백선혜·이정현, 문화영향평가 운영실태와 서울시 실행방안, 서울연구원, 2021 참조

V. 결론

41. 어떤 형태로건 현재의 지역문화는 여러 가지 경로에 서있다. 지역소비의 관점에서 분명 새로운 지역과 장소가 형성되며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가고 있다. 지역(민)의 공동체, 예술적 활동과 새로운 문화활동 측면에선 문화도시를 축으로 또 다양한 계획과 사업이 펼쳐지고 있다. 정부 또한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나설 전망이다. 그러나 지역의 문화가 생산되고, 그것이 시민들에게 선택되고 공유되며 새롭게 생산되고 있는가라는 관점에서 보면, 여전히 의구심이 된다. 지역은 아직까지 자신의 문화를 생산하고 드러낼 마땅한 준비나 수단을 갖고 있지 못하다.

42. 디지털과 온라인은 분명 새로운 자산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빠른 교통수단이 인구의 분산보다 집중을 가져오고 지역을 하나의 소비터로 만들었던 것처럼 디지털과 온라인 또한 새로운 자산이 아닌 TV나 신문처럼 자신을 잃게 만들 또 다른 매체가 될 수 있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정부는, 그리고 각 지자체는 이에 대한 면밀한 전략을 짜야 한다. 문화다양성과 민주주의는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거나 보장되는 것이 아니다. 거기에는 처절한 전략과 싸움이 동반되어야 한다.

43. 기후위기나 인간다운 삶, 번 아웃과 새로운 자기 표출 등 새로운 삶의 욕망은 분명 지역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한다. 그러나 그 또한 현재와 같은 도시구조와 채우기식 욕망이라면 미래는 없다. 그 곳 또한 똑같이 번잡하고 과소비하며, 번 아웃된 공간이기 때문이다. 인간다운 삶을 만들어 가는 시대의 코드에 맞춰 지역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는 과제다. 이 과제를 위해 문화도시 사업이나 문화영향평가와 같은 현재의 사업을 혁신적으로 개선하길 바란다. 지역이 하나의 공동체가 살아가는 삶의 지역으로 자신의 문화를 일궈나갈 수 있도록 새 정부의 새로운 정책의지를 기대해 본다. 끝.

토론 1-1

지역을 살리고 사람을 키우는 문화예술정책을

김선출
(전남문화재단 대표이사)

20대 대선이 끝났으나 그 어느 해보다 선거 뒤끝의 여진이 아직은 식지 않은 것 같다. 역대 최소의 격차와 거대 양당과 지지자들의 치열한 공방, 여기에 8회 지방선거가 이어지고 있는 이유 때문일까. 정권교체가 이뤄지면서 현 정부의 안티테제로 많은 정책이 새 정부 정책으로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문화예술 분야는 이마저 느끼지 못할 정도로 뒷전에 밀려있는 것 같다. 이는 선거 과정 대선공약에서도, 현 인수위 활동에서도, 특히 대선캠프나 인수위 참여 인사에서도 같은 모습과 인상이 죽 이어져 오고 있다.

“새 정부의 문화예술정책이 보이지 않는다”
“지난 정권 문화예술정책 재탕에 불과하다”

이런 평가에 더해서 새 정부 초대 문체부장관 내정자의 전문성 관련 논평과 새 정부 정책을 만드는 인수위원 가운데 현업출신 문화인사가 없다는 점 등까지 더해져 새 정부에서는 ‘문화예술 패싱’이라는 불만이 문화예술 현장에 팽배해지고 있다.
최초로 대통령 탄핵사태가지 불러온 요인 중 하나인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태와 관련해 반성과 책임에 대한 언급이 없이 연루 공무원들이 복귀할 수 있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것에 대한 항의 시위도 벌어지고 있다.
정책은 결국 사람인데 최근의 새 정부 인사스타일을 보면 문화예술 산하기관에도 친분과 학연에 따른 낙하산 인사가 반복될 가능성도 농후하다는 걱정들도 많은 것 같다.

새 정부 시기는 세계적 대재앙을 겪은 코로나19 이후의 Post-Corona 시대로 문명사적 대전환의 시대이다. 인간과 자연의 새로운 질서, 기후위기와 생태계 보존, 인공지능을 필두로 4차 산업시대 도래 등 세기적, 세계사적 변화의 시대이다. 국내 사회적으로도 지역의 소멸, 양극화와 젠더 갈등, 다문화 전면화, 개인고립과 소외, 디지털 사회와 정보화 격차 등 많은 문제들이 쓰나미처럼 몰려오고 있다. 발제자가 밝혔듯이 이같은 문명의 전환은 기술만이 아니라 예술영역과 삶의 일상, 인간관계, 교육 등 인류문화의 전반에 걸쳐 이전의 생활과 사고방식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최근의 문화예술 영역은 고유의 창제작과 감상의 차원을 넘어 사회적 갈등 치유와 공동선을 지향하는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공공재로서의 역할이 특히 주목받고 있다.
특히 고유의 지역문화는 도시화와 지역소멸 가속화에 따른 위기 대응으로 주민주체의 지역 재생과 문화다양성 보존을 통한 지역 활성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

가 세계에 K-Culture 문화강국의 위상 제고와 문화 산업화의 원천을 풍부하게 하고 있다. 이같은 한국 문화예술의 저력과 역할에 비해 새 정부의 문화예술 비전과 정책은 아직 가시화되지 않았다고 하지만 출발이 미미하며 따라서 향후 더 큰 비중과 투자가 요구된다고 하겠다.

새 정부는 발제자도 살폈듯이 이전 정부들의 공과를 면밀히 분석해 먼저 인사와 정책을 가다듬고 공약한 제도 정비와 함께 예산 투자를 크게 확대하는 새 정부 문화예술 정책을 기대한다.
갑작스런 문화정책 전환이 아닌 과거 정부의 성공 정책은 계승해 발전시키고, 특히 직전 문재인 정부의 '사람이 있는 문화' 비전하의 예술인 창작권 및 복지지원 강화, 검열을 통한 인위적 배제인 블랙리스트 완전 해소와 예술인 권리보장 정착 등이 계승될 필요가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크게 신장된 K-Culture의 지속적 발전과 다변화를 위해서는 기초 문화예술과 지역문화에 대한 확고한 지원 정책, 전통예술의 현대화 등에 더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여기에 더해 상대적으로 돋보였던 문화예술인 기본소득 등 이재명 후보의 문화예술 공약에서 수렴할 수 있는 신선한 좋은 정책들은 과감히 수용하는 포용성이 새 정부 문화예술 정책에 스며들면 현장에서 큰 호응을 얻을 것이다.
새 정부는 향후 문화예술 진흥체계를 문화복지 기능과 예술지원 기능 중심으로 통합해 효율화하고 자율성을 보장한다고 했는데 그 방향성에 궁금증이 더해가면서 혹여 인위적 제도 개편과 관치인사가 개입된다면 제2의 블랙리스트 사태가 올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당연히 문화예술 현장과 기관 종사자들의 총체적 의견수렴이 필요하다.
결국 새 정부의 문화예술 향방은 누가 전략을 이끌고 문화정책은 어떻게 담론화할 것인가의 문제로 우선 귀결된다.
여기에 더해 강조한다면 발제자가 지적한 대로 포스트코로나 시대 핵심 중 하나가 되어야 할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지역별 문화격차 해소와 문화자치에 대한 정책의 강화와 문화예산 확보의 전망이다.

발제자는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제언으로 지역의 문화자치 강화와 '문화도시' 사업의 확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문화거버넌스 구축을 들었다. 이는 지금까지 줄기차게 제기된 문제이고 이제 그 실행이 강제되어야 할 시점이다. 다름 아닌 법제화, 시스템화의 과정이 중앙정부, 지방정부, 문화예술 중간조직, 문화예술 현장에서 상시적으로 실행, 정착되어야 한다는 의미다.

특히, 발제자가 제안한 정부-지자체 정책협력체로서 지역문화재단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강화되어야 하고, 현장의 요구와 현실을 충실히 반영한 국가 문화정책 수립의 견인차가 되어야 할 것이다.
발제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지역문화재정 확충은 제도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지역문화진흥법 상의 '지역문화진흥기금 조성'의 임의 규정을 강행 규정으로 바꾸고, 지방문화세 신설 편성을 위한 지방소비세율 조정도 검토될 수 있다. 문화예술로 할당 가능한 세원 발굴과 세법 개정 등 재정확충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새 정부는 문화예술지원 정책을 지역과 사람중심의 지원 정책으로 과감히 전환시켜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새 정부는 문화누리카드 지원금을 인상한다고 했는데 '농촌은 카드를 쓸 곳이 없다'거나 '언제까지 찾아오는 문화향유만을 바라보아야 하는가'라는 볼멘소리가 지역문화예술의 현실을 여실히 말해주고 있다. 'K-Culture는 서울문화의 글로벌 경쟁력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라는 말과 함께.
필자는 지역과 주민, 학교를 살리는 길에 문화예술의 역할이 있고 마을 커뮤니티 단위에 문화예술 거점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정책과 예산이 대폭 지원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는 최근 귀농 귀촌 예술인들의 활약과 성과에서도 그 필요성이 확인되고 있다. 지원의 방식이 지금의 일회성, 공모방식을 일률적으로 적용할 것이 아니라 지역 문화예술인과 단체, 청년 등에게 공모가 아닌 일정 비율의 할당제가 필요하다. 수월성을 이유로 대부분의 지원사업이 70~80% 수도권에 혜택이 돌아가는 것을 강제로 지역에 배분해 균형을 맞추어야 한다. 지역특화사업, 지역 문화복합공간(특히 Art & Technology Scene)도 지역 마다 골고루 조성되어야 문화격차와 불균형이 어느 정도 해소되면서 나라 전체의 문화예술 생태계 선순환으로 작동될 것이다.

한국이 영광스럽게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다고 한다. 한류가 세계의 각광을 받고 있다. 이 토대가 일찍이 백범 선생이 갈파한 문화강국 아니겠는가. 한 사회의 창조성과 상상력, 감성의 보루인 기초예술, 지역문화에 새 정부의 큰 역할을 기대한다.

토론 1-2

새정부 지역문화정책과 문화예술생태계 활성화방안 토론

장세길

(전북연구원 연구위원)

1. 대선공약, 문화는 있고 지역은 없다

2

지난 대선

이번 대선

	기대 공약	주요 내용
1	지역별 문화격차 해소 및 지역 중심 문화자치시대 개막	지역문화진흥법 생활문화센터 시군구별 1개 / 육성 문화도시 신규지정 / 육성 지역 문화재단 설립력 보장
2	전 국민 문화향유시대 확립으로 문화기본권 보장	문화누리카드 지원금 단계적 인상 공연의 소극공제 확대 다지털 기술 융합 문화예술교육사업(공간)조성
3	공정하고 사각지대 없는 예술인 맞춤형 지원	예술인을 위한 최소한의 사회안전망 확보 "지원한 적의 건넸은 적지 않다" 원칙 확립 문화복지 기능 / 예술치유 기능 중심 통합 예술인 생계주기별 맞춤형 지원
4	K-컬처를 세계문화의 미래로 발전	전통문화 보존 및 세계화 '문화민보 vs '문화수준' 확립 한류의 지속가능성 지원
5	K-컬처 스타트업 지원으로 세계를 리드하는 문화산업 신흥국 도약	글로벌 진출 지원체계 구축 대기업/중소기업 상생방안 마련 콘텐츠산업 발전 장기적 50만개 창출
6	전통문화유산을 미래의 문화자산으로 보존하고 가치 제고	문화재청(해양)개청 도입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비용 단계적 국가부담 문화재 국고지원 확대 / 제도개선
7	제약 없고 공정한 창작예술인 활동기회 및 가치 제고	장애예술인의 활발한 예술활동 지원 장애예술인을 위한 맞춤형 교육과정과 프로그램 개발

- 지역 간 균형발전이라는 목표 아래 문화시설(유휴공간 재생 포함) 확충, 생활문화 활동 지원, 문화의 경제적 가치를 강조하는 콘텐츠산업 육성, 문화유산의 보존에서 활용으로 전환 등이 강조됨
- 대선공약인데도 미래 지역문화정책 포괄하는 아젠다가 담기지 않음

개별단위 사업 아닌, 시대전환과 아젠다 중심으로 지역문화 총괄하는 국정과제 발굴, 계획수립, 추진

문화의 가치전환
적자생존경쟁 해소
실질적 문화자치

2. 문화의 가치 전환 : 방향과 과제

3

- 문화의 공적 기능 전환 : 신자유주의 시대의 **창조산업(경제적 기능)에서 포용사회 관련 사회적 기능으로 전환** (사회적 기능의 강조)

과제 예시

- **예술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공공지원 확대 및 지원제도 개선**
- **주요 사업(예, 문화도시)의 목표 전환: 경제적 기능에서 사회적 가치 창출로**

2. 문화의 가치 전환 : 방향과 과제

유럽 문화수도

문화 주도 도시 재생

- "유럽회원국 대부분은 도시의 브랜딩을 목적으로 유럽문화수도 이벤트를 활용한다." (Ayse Banu Bişkin, 2012) "문화유산의 보존을 통해 도시재생을 이끄는 유럽문화수도" (ZEYNEP GUNAY, 2006) **"유럽문화수도(ECoC) 사업은 본질적으로 문화를 활용한경제적 재생(economic regeneration)**이라는 개념과 밀접하게 연결됨" (Tamar West, 2022)
- 유럽문화수도 정책목적은 유럽의 문화적 통합이었으나, 각 도시는 문화주도 도시재생(Cultur-led regeneration)이 목적: 낙후된 공간의 재생(개발), 관광효과, 도시브랜딩 등
- (한계가 있으나) 유럽문화수도는 도시가 원한 목적을 달성

전주 전통문화도시 : 한옥마을

경제적 효과 / 결과적 성과

한국 문화도시

사회적 가치 실현

- **한국문화도시**의 출발은 유럽문화수도. 법적 지정 설계(박근혜정부)의 **대표 사례는 전주전통문화도시**(문화기반 도시재생-전통문화 활용, 도시재생과 관광 활성화, 브랜딩)
- 지정 정책설계에는 유럽문화수도 목적과 사회적가치 실현이라는 두 가지 목적이 혼재 (지자체가 원하는 건 유럽형)

비전 → 문화를 통한 지속 가능한 지역혁신 및 지역주민의 문화적 삶 확산

목표 → 지역사회 주도의 지역공동체 활성화
- 지역 고유의 문화자치 증진을 통한 지역 균형 발전
- 문화의 잠재성을 활용한 지속 가능한 성장기반 구축
- 문화적 도시재생의 접목한 사회혁신 제고

- 정책은 문화주도 경제적 재생이 목적이나, 현장에서는 사회적 가치 실현으로 방향이 전환 : **정책과 실천의 불일치**

완주 공동체문화도시 : 혁신형

사회적 효과 / 과정적 성과

2. 문화의 가치 전환 : 방향과 과제

사업의 문제점

- 유럽모델(한마디로 전주전통문화도시)을 원하는 정부/지자체와 사회적 가치를 강조하는 현장의 불협화음
- 불명확한 정책설계(비전과 목표) : 결과적 성과(유럽형) 중심에 사회적 가치가 혼재, 추상적 목표 설정
- 사회적 변화(현대사회에서 강조되는 문화의 기능)를 반영하지 못하는 정책 설계, 구체적 성과를 보여주지 못하고 문화운동적 관점이 강조되 결과성과가 미흡한 현장 (예, 구체적이지 못한, 지나친 거버넌스 강조 등)
- 정책관계자와 문화도시 컨설턴트 간 정책목표 이해의 차이:정책과 실천의 갈등 (무엇을 성과로 볼 것인가?)

1~2차 문화도시 성과가 없는 게 아니라, 성과가 다르다. 브랜드(문화주도 경제적 재생)가 아닌, 사회적 가치를 실현 중!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선택의 문제!
명확한 정책목표 설정에 따른 모델 선택!

유럽형 문화도시 **문화주도 도시재생** vs 한국형 문화도시 **사회적 가치 실현**

유럽문화수도가 문화적 도시재생정책의 글로벌 정책브랜드이듯 한국형 문화도시가 사회적 가치 실현의 글로벌 브랜드가 되도록

문화 기반 사회적 가치 실현 목적의 **한국형 문화도시 구축**

현대사회의 위험에 대응하는 문화적 도시발전

사회적 가치란

- 사회적가치기본법(안)
- **"사회적 가치"란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문화적 영역에서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가치로서 다음 각 목의 내용을 포괄하는 가치를 말한다.**
-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기본권리로서 인권의 보호,** 재난과 사고로부터 안전한 근로, 생활환경의 유지, **건강한 생활이 가능한 보건복지의 제공,** 노동권의 보장과 근로조건의 향상,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회제공과 사회통합,** 대기업, 중소기업 간의 상생과 협력, 품위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역사회 활성화와 공동체 복원, 경제활동을 통한 이익이 지역에 순환되는 지역경제 공헌,** 윤리적 생산과 유통을 포함한 기업의 자발적인 사회적 책임 이행, **환경의 지속가능한 보전, 시민적 권리로서 민주적 의사결정과 참여의 실현,** 그 밖에 **공동체 이익실현과 공공성 강화**

3. 적자생존경쟁 해소 : 방향과 과제

역량기반 대학교육

- "타인 스스로 신자유주의적 권력이 원하는 방향으로 욕망하고 행위하도록 하는 권력 행사라는 점에서 **역량기반교육을 통해 대학교육의 이념인 자유로운 주체의 양성을 실현하기는 어렵다. 통치성이 허용하는 주체의 자유란 전면화된 시장원리와 경쟁원리에 의해 구조화된 가능성 내에서만 존재**할 뿐인데, 이는 '통치성이 전제하는 주체의 자유의 역설적 성격을 보여줌과 동시에, 신자유주의 시대에 각 대학과 그 구성원들이 선택하도록 강요당하는 '역량기반교육'의 한계를 의미한다." (김민정, 2019)

지역문화 지원방식

- 신자유주의적 시장경제와 달리, 정부의 지역정책은 성장지향성과 기업중심성보다 정부주도의 분배지향성이 강하다(유재원, 2003)는 점에서 신자유주의적 전문가에 비판을 받음. 하지만 '공모'라는 경쟁방식으로 분배하고 지향점이 성장지향성을 추구하여, 신자유주의 경쟁이 낳는 문제가 지역문화 현장에도 고스란히 나타남
- 경쟁 관련 역량의 차이가 있는 지역을 같은 기준으로 경쟁하도록 유도하면서 결국 **신자유주의 역량(성장지향)이 있는 지역이 분배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임.** 이러한 흐름이 이어지면서 대학의 역량기반 교육처럼 **지역문화인력도 경쟁(공모)에만 몰두하는 문제 발생 : "공모 사냥꾼" 양산**

지역경쟁 과열, 사회갈등 발생, 기울어진 운동장 심화, 획일적 기획 등
신자유주의 적자생존 공모 방식에서 지역자율 계획형 지원 제도로 전환

과제 예시

- **예술인 지원 등 지역문화 관련 지원정책의 전면적 전환: 일회성, 프로젝트, 공모방식에서 다년 간 생애주기별 활동 지원 등**
- **단위사업별 공모에서 지역자율 계획형 지원(포괄보조금 지원)으로 전환**

4. 실질적 문화자치: 방향과 과제

지방분권이 위기가 되지 않도록!

(문화자치 제도 마련) 문화 분야 세부 법률에 따른 조례 제정이 아닌, 문화자치 관련 조례 발굴 제정/ 지역문화 대표하는 법률로서 지역문화진흥법 전부 개정 추진

(문화자치 재정 마련) 안정적으로 지역문화재정을 확보하는 근본적인 방안(문화교부세 등)이 필요

(문화자치 체계 구축) 지역으로부터 상향식 정책 협력 체계 마련, 다양한 주체 발굴과 체계화 필요 등

'문화중앙화'적 지역문화 제도/재정/체계 → '문화자치'적 제도/재정/체계

4. 실질적 문화자치: 방향과 과제

8

과제 예시

지방이양 문화시설문제

- **문화의집 사례 : 국가주도 문화의집 정책 추진, 지방이양 후 형식적인 사업화**
  - -제2의 문화의집 : 박근혜정부에서 시작한 생활문화센터
  - -문화기반시설(문예회관,박물관, 미술관 등)은 낙후되었으나 재정의 열악함으로 개선 어려움

문화기반 시설의 국가 통합관리

- **국립시설, 지역문예회관(지역거점시설)을 통합하여 국가 단위에서 관리**
  - -국립시설, 지역문예회관 통합, 또는 지역문화예회관 등 지역의 핵심거점 시설에 대하여 국가가 관리(시설개선, 운영 등)하는 방안을 마련
  - -(예시) 한국문예회관연합회를 문체부 출연 재단법인으로 설립, 시도별 문예회관을 통합 운영

지방이양 사업평가

국고보조 환원추진

지방이양이 곧 사업의 폐지

- 문화의집 사례 : 지방이양되면서 사업 중단, 형식화. 유사 사업을 국가가 다시 추진(생활문화센터)
- 문화특화지역 조성:지방이양 후 거의 폐지
- 오랜 시간 축적한 성과와 지역문화기반이 와해될 위기
- **문화 분야의 지자체 재량예산 비율이 99%임. 지자체가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도 되는 사업예산이 99%라는 이야기임. 문화기반 사업은 반드시 예산이 책정되도록 국고보조 사업화가 필요함**

기반사업의 국가사업으로 역이양

지방이양 복지사업의 국가 환원 사례

- 2006년(참여정부)에 지방이양된 사회복지사업 중, 지자체 추진이 미흡한 사업에 대해 국고보조사업으로 전환되는 예가 많음
- **장애인생활(거주)시설 운영,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노인복지시설 운영 등이 2015년 국고보조사업으로 전환**

4. 실질적 문화자치: 방향과 과제

9

과제 예시

(사례) 소방안전 교부세

-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10조의4 제2항 : 소방안전교부세 사용가능 대상사업으로 첫째, 소방분야는 소방인력 운영, 소방장비 포함 소방시설 확충 및 소방안전관리를 정함. 둘째, 안전분야는 안전시설 확충 및 안전관리 강화로 정함
- 같은 법 같은 조 제3항: 소방안전교부세의 교부기준으로 소방안전교부세 중 지방교부세법 제9조의4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부분은 인력 충원에 사용되어야 하며, 그 외의 부분은 소방시설 및 안전시설 현황과 투자 소요 100분의 40, 재난예방 및 안전강화 노력 100분의 40, 재정여건 100분의 20 등의 비중으로 교부기준을 정함
- 시도별 소방공무원 인건비에 대한 소방안전교부세 교부액은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금액에 시도별 소방공무원 비율을 곱하여 교부됨

(사례) 자치경찰 교부세(안)

- 자치경찰제 도입 이후, 자치경찰 교부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음
- 자치경찰 관련 재원 마련 방안 예시 : 자치경찰교부세(지방소득세 일부, 교통에너지 환경세가 개별소비세로 되는 경우 일부, 지방소비세 일부), 국고보조금, 포괄보조금, 보통교부세에 자치경찰 관련 항목 설치(불교부 단체는 별도 취급, 과거 교원봉급부담금 사례 참고)

(지역)문화교부세 신설 : 지방교부세법 개정 추진

- **자치경찰교부세 추진방안을 참조, 지역문화진흥을 담당할 지역문화교부세를 신설 : 지방교부세법 개정, 항목 신설**
- **문화시설 조성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거나 지역문화진흥 기반 분야 투입(지방이양 이전 균형발전특별회계 기능)**

4. 실질적 문화자치: 방향과 과제

10

과제 예시

지역문화 진흥법의 문제와 개선방향

- **2014년 제정한 지역문화진흥법, 모두 4차례 개정했으나, 대부분 일부개정**
  - -지역문화진흥계획 수립 관련, 지역문화협력위원회(시도) 관련, 지역문화실태조사 관련, 지역문화 정보시스템 관련, 전담기관 지정 관련, 온라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관련, 문화도시심의위원회 관련 등
- **지역문화진흥법에 대해 생활문화진흥법으로 평가**
- **(중앙)정부가 생각하는(탑다운), 정부가 해야 하는 지역문화정책에 대하여 법률화**(주요 내용이 문화체육관광부 관련 추진정책과 사업)
- **지역문화 제도, 재정, 추진체계 및 자치역량 관련 내용을 전부개정 추진**
- **지역문화진흥법 개정 또는 가칭 문화자치지원법 신설**

지역문화 정부조직 설립

- **지역문화를 총괄하는 정부조직을 신설**하거나, 또는 문화재청 기능을 확대하여 **지역문화청으로 전환**
- 정보조직 신설이 어려우면, 지역문화를 총괄하는 **정부출연기관을 설립하거나 기존 조직 기능을 강화**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규모와 기능을 가진 '지역문화(진흥)원' 또는 '지역문화위원회' 등을 구상
- 현 지역문화진흥법이 규정하는 **지역문화협력위원회 기능을 강화** : 현재 심의 기능을 가지고 있으나, 형식 절차 승인에 그침. **실질적으로 상향식 지역문화정책이 수립되는 권한을 갖는 상설 기구로 전환**

(예시) 문화재 구분 폐지

- **국가지정 문화재와 지방지정 문화재 구분 폐지 또는 관리의 국가책무화**
  - -모든 문화재는 한민족 문화로서 의미. 국가/지방으로 구분함으로써 문화유산 간 서열화 발생
  - -지방지정 문화재를 국가지정 문화재로 전환 : 법률 개정
  - -국가 및 지방지정 문화재로 구분하더라도, 지방지정 문화재 보존 관리에 대한 국가책무화(재정)

감사합니다.

토론 2-1

문화분권, 문화자치를위한 지역문화정책 프로세스 제안에 관한 토론문

류상록
(전북문화관광재단 문화예술진흥본부장)

이승택 발제자의 발제문 중 가장 눈에 들어오는 1) 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 2) 문화예술발전과 향유, 3) 문화산업으로 일자리 창출 등 경제적 역할, 4) 균형발전, 특성화는 수도권을 포함한 모든 지역에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정책 프로세스의 제안은 발제자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특히 생활문화도시와 관련된 발제자의 비결은 타지역에도 좋은 예가 되리라고 본다. 다른 지역의 사례, 특히 우리 전북의 삼례문화예술촌이나 논산의 연산문화창고는 지역민의 자부심을 느끼고 전국의 좋은 표본이 될 것이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장의 변화에 따라 전임자의 행적 지우기가 되면서 문화공간의 부침이 있어 안타까운 현실이다.

전문예술 분야의 부분에서 지역의 문화예술 발전과 예술시장의 재편이라는 관점에서 새로운 공공예술기관에 대한 정책을 중앙정부에 제안하며,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 문화정책의 근간을 지방문화정책에도 유지되기를 기원한다.

지역문화정책의 기조는 첫 번째로 문화향유 대상인 국민의 기회를 균등하게 해야 할 것이다. 두 번째는 문화예술 전문인력(예술가, 예술 행정, 기획, 스태프) 고정적인 일자리를 창출하고 유지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지역 고유의 문화예술의 특성을 살린 예술상품을 지속해서 창, 제작하여 레퍼토리 화하여 지역 특성화를 통한 예술 발전이다. 네 번째로는 이미 소멸해 버린 지역의 예술시장을 되살리기 위한 중앙정부의 인위적인 시장 부양이다. 지역의 문화예술 발전과 시장형성을 위한 제안은 예술거점도시 사업을 통해 지역의 예술계 학교의 활성화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이 네 가지 부분을 동시에 만족할 수 있는 국공립공연예술기관의 지역 이전과 국립현대미술관의 지역 분관 설치를 제안하고자 한다.

한국은 4개의 국립극장과 4개의 국립국악원을 가지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직접 운영하는 국립극장과 국립아시아문화의 전당, 특별법인 예술의 전당, 그리고 법인형태의 정동극장이 있고, 서울, 남원, 진도, 부산에 있는 국립국악원이 국가가 운영을 책임지는 국가문화예술기관이다. 국립예술단체도 국립극장 소속 3개 단체(창극단, 무용단, 국악관현악단), 법인형태로 운영되는 국립극단(명동예술극장), 국립오페라단, 국립발레단, 국립합창단,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 국립현대무용단, 서울예술단 등이 있다.

김대중 정부에서부터 시작된 국립극장과 국립예술단체의 개편과 개혁은 이미 그 정책적인 한계가 지났고, 21세기 문화예술을 담을 수 있는 국립공연예술기관과 단체로 재편해야 한다. 시대적인 명제는 지역의 문화자치와 특성화와 연관하여 정책적인 재편이 이루어져야 한다.

우선 앞으로의 모든 제안은 건축의 측면이 아닌 기존 극장의 재구성과 국립예술단체의 재편, 그리고 지역의 예술계 학교와 한예종의 재편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이미 포화상태인 전국의 문예회관은 광역시급에서는 제대로 운영되지만, 대부분이 실질적인 운영은 기대에 못 미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아래의 제안은 문예회관의 활성화에도 이바지하리라고 본다.

첫 번째는 국립공연예술센터의 지역 설립이다. 연극, 전통예술(창극, 무용, 국악관현악), 서양예술(오페라, 발레, 합창, 오케스트라), 현대 예술(현대무용, 뮤지컬), 그리고 마임과 융복합 다원 예술 다섯 개 분야와 제주지역에 대한 안배로 관광 공연 전문 민속예술단체의 설립을 포함하는 국립지역공연예술센터를 공모를 통해 선정하는 것이다. 광역자치단체가 공모 지원을 하고 기존의 공연장을 활용하되 기존 예술단체와의 경쟁, 그리고 지역 예술계 학교와의 연계 방향 등을 주안점을 두고 심사해야 한다.

두 번째는 국립창작센터를 기초자치 단체에 공모를 10~15개 정도 선정하여 기존의 공연장을 활용한 예술단이 아닌 프로덕션 형태의 제작극장 설립 운영하는 방안이다. 국립공연예술센터가 예술단의 이전과 재편을 통한 지역문화의 활성화와 지역의 예술 특성화를 살린다고 한다며, 국립창작센터는 공연 제작의 노하우가 있는 예술감독을 5년의 임기로 자율권을 주고 프로덕션 형태의 운영을 하면 된다. 서울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신청할 수 있나 역시 공모를 통해 지역의 기존예술단체와의 협업과 경쟁을 통해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예술시장으로 바꾸어야 한다.

세 번째는 한국예술종합학교의 분야별 지역 이전이다. 음악원, 연극원, 무용원, 전통예술원, 미술원, 영상원을 지역에 맞게 이전하여 지역이 전문예술교육, 창작, 제작의 실질적인 계통을 밟아 창작의 산실이 되게 하는 것이다.

네 번째는 국립현대미술관의 분관을 광역자치단체별로 1개씩 선정하여 운영하여 미술시장의 활성화와 비엔날레와의 연계를 통하여 순수예술 콘텐츠를 통한 미술시장의 활성화와 새로운 21세기에 미술 장르의 개척과 미디어 아트를 지역 예술 활성화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이렇게 설립되는 국립예술센터와 국립창작센터, 그리고 현대미술관 지역 분관은 설립형태와 운영방법에 대해서 현재의 국립운영방식을 따를 필요는 없다고 본다. 각 지역은 공청회와 운영방식 토론회 등을 거쳐 지역에 맞는 형태 설립과 운영이 필요하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직접운영을 하는 방법도, 재단법인을 통한 운영도 모두 열어놓고 논의를 해야 한다. 그러나 국가 예산이 50% 이상 항상 지원하는 예산구조는 만들어야 하고, 운영은 지역의 자율에 맡기는 것이 방향이어야 한다. 각 예술단의 국립예술센터 간의 교차공연과 순회공연을 통해 전 국민이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닌 평평한 운동장에서 문화예술을 즐기는 시대가 되었으면 한다.

토론 2-2

분권과 자치를 통한 지역문화진흥과 문화재단의 역할

김정숙
(담양군문화재단 사무국장)

문재인 정부의 문화정책인 '문화비전 2030'은 자율성, 다양성, 창의성을 3대 가치로 하여, 개인의 문화권리 확대, 문화예술인 및 종사자들의 지위와 권리 보장, 성평등 문화 실현, 문화다양성 보호와 확산, 공정하고 다양한 문화생태계 조성, 지역문화 분권 실현, 문화자원의 융합역량 강화, 미래와 평화를 위한 문화협력 확대, 문화를 통한 창의적 사회 혁신 등 9가지 정책의제로 구성되어있다. 여기서 지역 분권, 지역으로부터의 상향식 정책 수립, 민관 협치 등이 핵심적 정책의 방향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막상 지역현장에서 바라보았을 때, 지역 문화의 생태계안에 자율성, 다양성, 창의성의 가치들이 실현되고 있는지, 지역민들은 공정하고 다양한 문화적 권리를 누리고 있는지, 더 나아가 주민의 삶을 담아내는 생활문화와 지역 특성이나 공동체의 가치를 되살리는 공동체 문화나 공공예술이 우리에게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많은 지역들이 문화도시를 향해 나아가는 길목에서 이러한 물음들은 문화민주주의를 실현해 나가야 하는 지역문화재단의 역할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 보게 한다.

2014년에 제정된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르면, 정부차원에서 정책적으로는 이미 지역과 일상에서 문화를 누리는 생활문화 시대를 열었다. 그러나 지역적으로 실효를 거두는 데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할 뿐 아니라, 지자체 간의 격차나 기존 인프라 및 행정 운영의 방향에 따라 상당히 차이가 존재한다. 기존의 문화정책이 시민들에게 관람을 통해 고급문화를 향유하게 하는 문화의 민주화이었다면, 생활문화는 일상 속에서 직접적인 문화예술활동 참여를 통해 문화적 향유를 추구하는 문화민주주의를 지향한다. 이제는 생활문화가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인 문화예술 공동체 활동이라는 점에서 문화도시의 핵심콘텐츠로 부상하면서, 전국적으로 생활문화조례의 제정과 지원사업, 생활문화센터의 설립이 꾸준히 추진되어왔다.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서도 '지역과 일상에서 누리는 생활문화 시대', '창작 환경 개선과 복지 강화로 예술인의 창작권보장' 등을 제시해왔고, 기초지자체에서 이러한 역할과 기능을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매개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기관이 바로 문화재단이다. 지역문화재단은 지역문화진흥의 핵심 주체로서, 지역의 문화예술 생태계를 조성하고, 지속적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플랫폼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다.

지역문화진흥을 위해서는 문화자치와 문화분권이 핵심적 가치인데, 이것은 지역의 문화적 자생력과 자율성의 권리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문화분권은 지역의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고유의 문화양식을 창출하며, 지역 주민들의 문화향수와 문화참여의 권리를 보장하는 핵심정책이라 할 수 있다. 문화분권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문화정책과 사업이 중앙에서 결정되어 아래로 전달되어 실행되는 과거와는 달리, 행정의 가장 기초단위인 마을에서 시작하여 기초문화재단을 거쳐,

광역문화재단이나 중앙 정부로 올라가는 상향식 운영방식을 기초로 하는 문화민주주의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 필요하고 문화활동가와 단체들을 통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문화자치는 이러한 문화분권에 의해 이루어지는데, 그 실현 방식은 협치에 있다. 협치는 지역주민이 공공결정을 위한 과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지역의 문화를 둘러싼 다양한 주체들과 행정과의 소통과 신뢰, 협력체계의 구축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문화재단의 중심적인 역할이 필요한데, 문화예술 분야에서의 주민자치권을 견인해내고, 주민의 문화적 삶의 향상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문화정책을 고민하며 지역에 맞는 다양한 문화사업들을 발굴하고 수행해가야 한다.

현재 지역문화재단은 새로운 시대 흐름에 부합하는 문화예술정책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선도적 기관으로 자리매김되어 왔고, 그 지역의 문화적 역량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고 있다. 문화재단은 지역에서 필요한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직접 실행하거나 지역의 문화예술단체 등과 연계 · 협력하여 지원해주고 매개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이처럼 문화재단은 지역의 문화 주체들과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지역의 문화지형을 새롭게 형성하거나 보완해 나갈 수 있다. 특히 문화자치를 기반으로 하는 문화도시 형성과정에서 지역문화의 방향을 설정하고, 실행과정에서 지역의 문화주체들의 협치를 이끌어 내는 핵심 주체로서 문화재단의 역할과 과제는 더욱 중요해질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 걸맞게, 지역의 기초문화재단은 문화의 최종 참여자이자 수요자인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수요자 중심의 문화사업을 기획하고, 지역 문화 주체 간의 안정적인 협력망 구축과 지역 문화자원 조사 및 문화자원 플랫폼 구축, 지속가능한 문화생태계 형성을 위한 지역문화인력 양성과 역량 강화를 통해 지역의 문화경쟁력을 높여 가야 할 것이다.

끝으로 장기간에 걸친 팬데믹 상황으로 문화예술 창작 환경 및 시민의 문화권이 크게 축소되어 지역의 문화생태계는 매우 위축되어 있다.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지역의 창작자와 주민들에게 안정적인 창작여건과 생활문화환경을 만들어 지역 문화생태계의 회복과 지역문화진흥의 동력을 이끌어내야 할 문화재단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문화의 창작자와 수요자 모두가 문화를 통해 더 나은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지역의 문화 주체들과 지속가능한 문화생태계를 조성하여, 문화를 통한 지역 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가는 것이야말로, 지역문화재단 종사자들의 막중한 임무일 것이다.

토론 3-1

새 정부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언에 대한 소고

백옥선
(전주문화재단 대표이사)

○ 새 정부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언을 해주신 라도삼 박사님께 감사드리며 모쪼록 오늘 포럼이 지역문화를 활성화할 수 있는 담론의 장이 되길 기대합니다.

○ 발제자께서는 팬데믹과 지역소멸이 가져온 새로운 패러다임을 유도하는 여러요인들, 즉 디지털기술, 기후위기, 공정과 상식이라는 시대가치 개념들로 인해 새 정부의 새로운 표준(New Normal)에 맞는 정책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제언하고 계십니다.

○ 더불어 새 정부가 제시한 문화정책 기본방향이 문재인 정부의 문화정책에서 기추진되고 있는 정책방향과 크게 다르지 않고, 문화자치와 문화분권의 문제 또한 좀 더 개선되거나 개편하는 정도에 머물 수 있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 본 토론자는 문화자치와 문화분권의 문제는 정부의 정책적 절대적 의지가 필요한 문화행정의 혁신과 전달체계의 개선이 시급히 이뤄져야 하고, 지역현장에서는 지역민이 주체가 되어 공동체 문화를 만들어나가는 과정에서 문화생산자와 수요자 사이의 참여와 소통, 협력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지역의 문화적 고유성과 예술적 가치가 발현되는 시스템을 만들어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 풀뿌리 문화활동의 활성화를 토대로 한 문화자치와 문화분권의 실현을 위해서 발제자께서 제안하신 별도의 센터 등 지방문화를 총괄할 수 있는 정부조직의 신설을 통해 실질적인 실행조직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동의하며 이를 위해서는 지역문화진흥법 개정이 시급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말씀도 곁드립니다.

○ 지역문화재단의 자율성 확보와 문화적 다양성과 창의력의 토대 마련을 위해서 상향식 지역문화진흥계획과 문예진흥기금의 지역 배분의 강화, 지역수요자 중심 전달체계가 강화되어야 한다는 새 정부 공약내용이 지켜지길 기대하며, 발제자께서 지적하신 사업전달체계인 하청업체 또는 배달사업소와 같은 사업의 이양방식이 아닌, 바텀 업(Bottom-up) 방식의 추진을 통해 지역의 고유한 문화 정체성이 자리잡을 수 있도록 권한이 부여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덧붙이고자 합니다.

○ 또한 관행처럼 집행되어온 재원전달의 방식 즉, 공모형태의 경쟁을 통한 자원배분 방식과 수월성을 내세운 이관 사업의 추진에서 벗어나, 지방자치단체 포괄보조금 형식의 교부 또는 직접 출연을 해주는 방식으로의 전환이 조속히 추진되어야 한다는 제언도 드립니다.

○ 무엇보다도 문화의 생산과 소비와 분배를 탈중앙화시키고, 지방자치단체와 주민이 주체적이고 자율적인 문화활동에 참여하게 하고, 문화정책 결정과정에서 소통과 협치가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정책협력 플랫폼 구축을 위해서는 문체부 산하기관의 역할 재조정이 필요하며, 실질적이고도 공식적인 참여 기제인 시·도 지역문화협력위원회를 설치(지역문화진흥법 제6조의 2)하여 상향식 정책협력체계가 시급히 구축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 발제자께서는 새 정부의 표준에 맞는 지역문화정책의 여러가지 방향을 제언해주셨는데, 두 개의 방향에 대해서만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디지털화라는 의제 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새롭게 다가온 언택트 환경과 디지털 기술의 진보는 기존 예술 생태계를 전복시킬 만큼 거세게 다가온 것이 사실입니다. 코로나19로 강요되어진 언택트 세상에 예술가들에게 디지털 컨텐츠 개발과 유통은 생존을 위한 전략으로 인식은 되었으나, 낯설기만 한 디지털이라는 매체의 수용은 기능적 측면에서나 비용적인 면에서나 장벽이 높습니다. 발제자께서 이 지점에서 디지털 격차해소와 디지털 난민에 대한 정책적 배려와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신 것으로 적극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기후위기는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화두입니다. 전 세계적 공통위기인 기후위기를 맞아 문재인 정부는 기후위기위원회를 만들었으며, 그린뉴딜 구상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예술가들의 창조활동 가운데 탄소배출을 줄일 수 있는 구체적 실천사례들이 개발되어 공유되고, 전반적인 창작현장에서 실천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환경에 대한 예술적 접근을 통해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환경문제에 대한 문화적 해결의 발판이 마련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예술가들의 근원적 사유를 통해서 위기에 처해있는 지구생태계에 대한 경고와 더불어 지구환경의 중요성이 공감되어 실천으로 이어지는 계기를 지역문화재단 사업을 통해서 구현되길 희망하고 있습니다.

○ 새 정부 출범을 계기로 지난하게 논의되었던 문화자치와 문화분권의 실현이 진일보하길 기대하며, 문화경쟁력의 원천인 고유성과 독창성이 발휘되는 진정한 문화자치의 실현을 위해서 지역문화예술 진흥의 엔진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지역문화재단의 역할과 위상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예술의 통시적 전망과 지속성, 문화정책 결정과정에서의 팔길이원칙의 적용과 협력 거버넌스의 구축을 위해서 지역문화재단의 제도적·재정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말씀을 거듭 드리면서 토론을 마치고자 합니다.

토론 3-2

지역문화활성화 방안에 대한 토론문

김규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동감과 요망

라도삼 박사님의 발제문에 전반적으로 동의하며 특히 정책 방향에 몇 가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이는 다음과 같다.

1. 문화정책이 이원화의 제도적인 정리: 특히 예술정책에 대한 큰 그림과 제도적 변화가 기관 통합과 아울러 필요하며 이와 함께 지역문화관련 기관의 혁신이 필요.

2. 지역문화진흥계획의 위상 및 실질적 의미 확대: 물론 정부의 법정계획도 제대로 된 위상이나 구체적인 예산의 근거가 되지 못하고 있지만, 지역문화는 무엇보다도 지역문화진흥계획이 중심이 되어 (문화도시도 하위로 포함이 되는)야 한다.

3. 문화영향평가의 개선: 형식적인 문화사업의 평가를 넘어서 문화의 사회적 가치 제고라는 원래의 목적과 방향을 지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용산이전 문화영향평가를 제안한다.

■ 의문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의문이 든다.

1. 지역문화자치에 대해 문재인 정부가 표명했다고 하는데 무엇을 했는지 '표어' 뿐이었고 중앙행정부처 및 기관에 종속되는 상황은 더욱 심화되었다. 재정, 행정, 의제 등에서 위험하고 험난하더라도 자치의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요구와 실행이 필요하다.

2. 지역문화활성화
지역문화활성화가 도대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알 고 싶음. 아니면 지역문화활성화를 설정하는 기준, 주체에 대해 알고 싶음.

3. 지역소멸
정부에서 제시한 인구감소가 '지역소멸'로 치환될 수 있는지. 지역의 매력 혹은 기회에 대한 긍정적 요인을 확대하는 방향에 대한 생각은. 기후위기, 축소도시의 가능성은 없는지.

4. 디지털화
연결하여 지역의 매력에서 오히려 디지털화와 아날로그의 균형이 강점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닌지. 물리적 거리의 한계를 벗어난 디지털의 장점을 지역에 활용하되 아날로그적인 일상(물론 피상적이지만)의 장점의 균형을 맞출 수 있을지.

5. 재원
재원에 대해서는 격히 공감함. 지역문화에 국한할 경우 재원 이전에 제도적 변화를 지역이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에 대한 고려가 필요.